



전라북도 취약계층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구



Jthink 2010-PR-03

전라북도 취약계층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구

2010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전라북도 취약계층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구 / 홍성효, 김성민, 유태우, 서은영. -- 전주 : 전북발전연구원, 2010

p. ; cm. -- (전발연 ; 2010-PR-03)

참고문헌 수록

ISBN 978-89-92471-94-7 93330 : 비매품

일자리 창출[一創出]

321.524-KDC5

331.12-DDC21

CIP2010002812

연구진

연구책임	홍성효 • 전북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진	김성민 • 전북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
	유태우 •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원
	서은영 •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원
자문위원	김동주 • 우석대학교 교수
	남연희 • 한일장신대학교 교수
	박주종 • 전라북도 노인일자리추진본부 본부장
	양종주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 부장

연구관리 코드 : 10JU12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연구의 요약

1. 연구목적 및 방법

- 본 연구는 전라북도 취업취약계층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도내 고령자·여성(특히, 경력단절여성)·장애인의 현황과 이들의 경제활동 현황 등을 분석하고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 및 해외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대한 사례를 검토하여,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그리고 이를 반영한 구체적인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제안하고자 함
- 연구의 수행을 위해, 먼저 취약계층의 현황과 이들의 경제활동참여에 관한 자료를 이용하여 전라북도의 특성을 분석한 후,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관한 선행연구를 포함하는 관계문헌의 검토와 국내외 사례의 검토를 통해 기존에 전라북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사업들의 문제점을 파악하며 전문가의 자문과 일자리 창출사업 관계자 및 참여자에 대한 인터뷰 등을 통해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전라북도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기본 방향과 개선방안, 그리고 이에 기초한 구체적인 사업의 예시를 제시함

2. 주요내용

■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필요성

- 현재의 고령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는 2018년에 고령사회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인 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며, 전라북도의 경우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1년의 10.67%에서 2008년 14.69%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의 사회적 일자리 혹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에 의한 고용을 제외한 민간에 의한 순수 고용률은 크게 나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고령자에 대한 취업기회의 확대 없이, 지금과 같은 고령화가 지속될 경우 이들을 부양해야 하는 사회전체의 부담-이를 테면, 연금 재정의 악화-는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임

- 여성은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의 단절을 경험하고 이로 인해 노동시장 재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취업기회의 확대를 위한 노력의 부재는 우리나라 저출산현상을 지속시킬 것이고 이들의 학력수준이 남성의 그것과 동등한 수준으로 높아졌음을 감안할 때 이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사회적 비용의 발생을 의미하기 때문에 공공에 의한 이들의 취업기회 제공이 정당성을 얻게 됨
- 고령자와 마찬가지로 전라북도 장애인의 인구비율 또한 2002년의 3.93%에서 2008년의 6.5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의 고용은 크게 증가하고 있지 못한 실정임. 도내 장애인의 구직정보를 분석한 결과,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상당수가 중증장애인이었으며 취업에 대한 경험이 없는 경우도 다수이며 민간 기업에서 이들에 대한 고용을 꺼리는 주된 이유가 장애인에게 적합한 업무의 부족임을 감안할 때 이들의 고용촉진을 위한 공공의 개입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임

■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현황

-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시행 초기에는 사회적 일자리가 정부의 재정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저임금의 공공근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음. 이로 인해 정부는 2005년부터 사업유형을 ‘공익형’과 ‘수익형’으로 구분하고 공익형 사업은 원칙적으로 1년 지원에 한정하는 반면 수익형 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간 지원받도록 함으로써 수익형 사업의 비중을 높이려고 노력하였음. 나아가, 2006년에는 기업과 NGO 혹은 여기에 지자체가 포함된 협력체를 구성하여 대규모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중장기적으로 자립을 지향하는 기업연계형 프로젝트 사업과 광역형 사업모델의 발굴과 확산에 중점을 두었음.
- 2009년 6월말 기준으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노동부를 포함하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참여자의 수가 12,997명에 이룸. 전라북도의 경우 올해(2010년) 18,919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노인을 위한 1만3천개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2,437백만원의 예산으로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지원하며, 2,478백만원의 예산으로 350개의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임

■ 외국의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사업

- 일본은 고령자의 개호(介護)를 위한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이들 고령자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지역공동체 전체를 위한 지역단위의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이뤄짐을 볼 수 있음

- 근래 미국의 저소득계층을 위한 정책은 수급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이를 위해 수급조건을 강화하고 근로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있으며, 주로 지방정부와 민간단체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추진되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경우도 참여자들이 지원받는 일자리에서 지원이 없는 민간 일자리로 조속히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더불어,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추진주체(연방정부, 주정부, 카운티, 지역 에이전시, 사업참여자)간 각기 명확한 역할이 분담되어 추진상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됨
- 영국은 뉴딜 프로그램을 통해 연령대별로 대상을 구분한 후, 각 대상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일자리 창출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임. 복지수혜자 가운데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자립을 유도함으로써 정부의 복지재정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부분적으로는 민간단체에 의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지원함

■ 기존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한계

- 기존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일자리의 지속성이나 괜찮은 일자리의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점 이외에 일반적으로 목표가 명확하지 않고 일부 사회적 일자리는 민간에 의한 정상적인 일자리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내용적 측면에서의 개선이 요구됨
- 전라북도의 경우 시장참여형 사업의 낮은 비중과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업의 부재와 같은 추가적인 문제를 지님. 국내외 성공 사례를 보면,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특정 계층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

여러 계층을 사업에 참여시킴으로써 사회통합을 달성하고 환경, 문화, 예술, 전통 등 사업을 다양한 분야에서로 확대되고 있으며, 또한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사업의 초기단계인 기획에서 추진과정 까지 민간을 참여시킴으로써 사업의 실효성을 높임

■ 전라북도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개선방향

- 전라북도의 사회적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자원의 연계 강화, 사업의 이원화, 참여대상별 사업 목표의 차별화, 기업연계 활성화를 통한 지자체 예산부담 경감 등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
- 취약계층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제안하면, 노인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로 문화유적지에서의 전통혼례 혹은 민속놀이의 재현, 도심 학생들의 대안교육을 위한 자연체험학습장의 운영,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를 이용한 택배사업, 그리고 구도심 재생을 위한 공개공지의 관리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임. 여성의 경우 도내 상당수의 야학에서 교사를 구하고 있지 못한 실정을 고려해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을 야학교사로 파견하는 사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며, 장애인의 경우 기업을 연계한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추진이 적합할 것임

목 차

제 1 장 연구의 개요	3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 2 절 연구내용 및 방법	6
제 2 장 전라북도 취약계층 현황	9
제 1 절 인구통계학적 현황	9
1. 고령자	9
2. 여성	13
3. 장애인	15
제 2 절 취업 및 구직 현황	18
1. 고령자	18
2. 여성	23
3. 장애인	29
4. 시사점	35
제 3 장 사회적 일자리 사업 현황	39
제 1 절 중앙정부 사회적 일자리 사업	39
1.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전반	39
2. 고령자	43
3. 여성	44
4. 장애인	46
제 2 절 전라북도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	47
1. 고령자	47
2. 여성	50
3. 장애인	52

제 3 절	외국의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사업	54
1.	일본	54
2.	미국	56
3.	영국	58
4.	시사점	62
제 4 장	전라북도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발전방향	65
제 1 절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성공요인	65
1.	기존 사업의 문제점	65
2.	성공사례	68
제 2 절	전라북도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방향	72
1.	기본 방향	72
2.	제안 사업	80
제 5 장	결 론	85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85
제 2 절	정책적 함의	88
참고문헌	91
부 록	95

표 목 차

<표 1-1> 전라북도 내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	4
<표 1-2> 전라북도 내 30-34세 여성 가운데 고교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의 비율	4
<표 1-3> 전북의 장애인 인구비율	5
<표 2-1>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추이	9
<표 2-2> 노인복지 관련 예산	10
<표 2-3> 65세 이상 고령자의 건강보험 의료비 현황	11
<표 2-4> 연령대별·연도별 고령인구	12
<표 2-5> 연령별 인구추이	13
<표 2-6> 성별 가구주 추이	13
<표 2-7> 연도별·연령대별 전라북도 여성 가운데 대학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의 비율	14
<표 2-8> 장애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대비 소득인정액 분포	15
<표 2-9> 장애수당 수급자 수	16
<표 2-10> 연도별 장애수당 지급현황	16
<표 2-11> 전라북도 유형·등급별 장애인 수	17
<표 2-12> 산업별 고령층의 취업자 현황	18
<표 2-13> 직업별 고령층의 취업자 현황	19
<표 2-14> 미취업 고령자의 구직경험여부 현황	19
<표 2-15> 향후 취업의사 및 취업동기	20
<표 2-16> 향후 일자리 선택기준	21
<표 2-17> 희망 임금수준	21
<표 2-18> 희망 일자리 형태	22
<표 2-19> 고령층의 경제활동 현황	22
<표 2-20> 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24
<표 2-21> 여성의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24
<표 2-22> 취업자의 성별·종사상지위별 구성비	25

<표 2-23> 전문·기술·행정관리직 종사자 비율	26
<표 2-24> 전북 성별 경제활동인구	27
<표 2-25> 전북 산업별 취업자 수	28
<표 2-26> 전북 직업별 취업자 수	28
<표 2-27>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29
<표 2-28> 장애인의 장애유형별 경제활동상태	30
<표 2-29>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31
<표 2-30> 민간부문 장애인 근로자 구성	32
<표 2-31>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산업별 장애인 고용현황	33
<표 2-32>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지역별 장애인 고용현황	34
<표 3-1> 연도별 사회적 일자리 사업 추이	40
<표 3-2> 사회적 일자리 참여자 현황	41
<표 3-3> 취약계층의 사회적 일자리 참여 현황	41
<표 3-4> 분야별 사회적 일자리 참여자 현황	42
<표 3-5> 연도별·분야별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현황	42
<표 3-6> 고령자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분류	43
<표 3-7> 장애인일자리 창출사업 분류	46
<표 3-8> 2010년도 전라북도 고령자 일자리 창출사업 현황	47
<표 3-9> 2010년도 전라북도 고령자 사회적 일자리 사업 현황	48
<표 3-10> 2010년도 전라북도 고령자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지역별 현황	49
<표 3-11> 2010년도 전라북도 여성 일자리 사업 현황	51
<표 3-12> 2010년도 전라북도 여성직업훈련기관 현황	52
<표 3-13> 전라북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 현황	53
<표 3-14> 실버인재센터의 주요 일자리 유형	55
<표 3-15> 영국 사회적 기업의 유형화	60
<표 3-16> 영국의 파트너십 사업	61
<표 4-1> 지역자원연계 사업 사례	75
<표 4-2> 장애유형별 특화훈련센터 운영 현황	78
<표 4-3> 기업연계형 사회적 일자리(기업) 사업 사례	79

그림 목 차

<그림 4-1> OECD주요국 사회서비스 고용비중 현황	73
--------------------------------------	----



제 1 장

연구의 개요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 2 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 1 장 연구의 개요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전라북도 취업취약계층(고령자, 여성, 장애인)의 일자리-특히 2003년 노동부에서 처음 시행되어 여러 중앙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 혹은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을 위한 방안에 대해 고찰한다. 통상적으로 사회적 일자리는 다음의 세 가지 특성을 갖는 일자리로 정의된다. 첫째, 일자리 창출의 목적이 실업자 및 사회적 약자의 취업을 촉진하는 것이고, 둘째, 일자리 창출의 방식이 국가나 시장(민간기업)이 아닌 비영리민간단체의 참여를 중시하며, 셋째, 창출된 일자리는 지역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소외계층의 사회통합을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를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사회적 일자리는 '사회적으로 유용하지만 정부의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민간기업도 수익성문제로 참여하기 어려운 사회적 서비스분야를 중심으로 비영리단체에 의해 창출되는 일자리'로 규정된다(김영철·이민환, 2006). 일례로 사업초기에 급속하게 확산되었던 복지간병사업은 저소득층 실직자를 대상으로 국가가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비영리민간단체들이 그들을 교육하고 지원하여, 가난한 고령자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게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일자리의 세 가지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정부의 시각에서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은 빈곤 취약계층에 대한 온전한 일자리 제공, 노령화에 따른 급증하는 사회서비스 수요의 생산적 제공,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의미 있는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는 성장 잠재력의 확충 차원에서 필요하다(전병유 외, 2003).

전라북도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도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1년의 10.67%에서 2008년의 14.69%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추세는 고령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공공에 의한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통해 고령자 자신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연금의 수지 개선과 같은 사회전체에 대한 편익을 발생시킨다.

〈표 1-1〉 전라북도 내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

(단위 : %)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비율	10.67	11.29	11.71	12.41	12.87	13.40	14.21	14.69

자료 : 전라북도 도정현황통계시스템

30~34세의 전라북도 내 여성 가운데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의 비율은 1995년 23.4%에서, 2000년 32.2%, 2005년 46.4%로 상승하였으며, 이는 동기간 남성 비율의 변화(1995년 38.0%, 2000년 43.9%, 2005년 49.1%)와 비교할 때 여성의 학력수준 상승이 상대적으로 훨씬 빠름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여성의 평균학력 상승은 출산과 육아로 인한 이들의 낮은 경제활동 참여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공적인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재)취업 기회의 확대가 요구된다.

〈표 1-2〉 전라북도 내 30-34세 여성 가운데 고교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의 비율

(단위 : %)

구분	1995	2000	2005
여성	23.43	32.19	46.40
남성	37.98	43.90	49.11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전라북도의 장애인 수는 2002년 77,122명에서 2008년 120,481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전체 인구에서 장애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도 2002년의 3.93%에서 2008년의 6.50%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의 취업에 대한 의지는 비장애인 못지않게 강한 반면, 이들에 대한 고용률은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계속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1)

1)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장애인의 고용률은 1991년 0.40%에서, 2000년 0.73%, 2008년 1.72%로 지속적으로 상승은 하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임.

〈표 1-3〉 전북의 장애인 인구비율

(단위 : %)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비율	3.93	4.30	4.80	5.36	5.84	6.20	6.50

자료 : 전라북도 도정현황통계시스템

최근의 고령화추세의 지속, 여성 학력수준의 상승,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는 사회적 약자인 고령자, 여성,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사회통합을 이룸으로써 사회전반에 걸친 후생과 복지 증진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전라북도 내 취업취약계층의 현황을 파악하고 기존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내용의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함으로써 향후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취업 취약계층인 고령자, 여성, 장애인의 인구통계학적 현황 및 이들의 경제활동참여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이들에 대한 전라북도 차원에서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내용과 계획을 검토하고, 중앙정부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방향과 사업들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며, 외국의 정책 및 사례에 관해 개관한다. 제4장에서는 전라북도의 지역적 특성에 맞고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사업의 제안을 포함하여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책, 그리고 전라북도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연구의 내용과 정책적 제언을 요약한다.

이와 같은 내용의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먼저 취약계층의 현황과 이들의 경제활동참여에 관한 자료를 이용하여 전라북도의 특성을 분석한다.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관한 선행연구를 포함하는 관계문헌의 검토와 국내외 사례의 검토를 통해 기존에 수행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사업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전라북도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기본 방향과 구체적인 사업들을 제시한다.



제 2 장



전라북도 취약계층 현황

제 1 절 인구통계학적 현황

제 2 절 취업 및 구직현황

제 2 장 전라북도 취약계층 현황

제 1 절 인구통계학적 현황

1. 고령자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18년에는 고령사회(총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14% 이상)에, 그리고 2026년에는 초(超)고령사회(총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20% 이상)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 7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총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0.7%로 1999년의 6.9%에 비해 3.8%p만큼 증가하였으며, 저출산·고령화 추세의 지속으로 이 비율은 2050년에 38.2%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1〉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추이

(단위 : %)

구분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노년부양비 ¹⁾	6.1	7.4	10.1	15.0	21.7	37.7
노령화지수 ²⁾	11.2	20.0	34.3	67.7	125.9	213.8
노인 1명당 생산가능인구(명) ³⁾	16.3	13.5	9.9	6.6	4.6	2.7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주 : 1) 노년부양비 = (65세 이상 인구 / 15~64세 인구) × 100

2) 노령화지수 = (65세 이상 인구 / 0~14세 인구) × 100

3) 노인 1명당 생산가능인구 = 15~64세 인구 / 65세 이상 인구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경제활동인구(15-64세 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65세 이상의 고령자인구 비율로 정의되는 노년부양비는 2010년의 15.0%에서 2030년 37.7%로 크게 상승하고, 14세 이하 인구대비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백분율을 나타내는 노령화지수 역시 이 기간 동안 67.7%에서 213.8%로 크게 상승하는

한편, 노인 1명당 생산가능인구는 6.6명에서 2.7명으로 크게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고령화의 심화는 사회복지비용-이를 테면, 연금지출이나 노인의 의료비용-을 증대시켜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악화와 젊은 세대의 부양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이와 같은 고령화 추세로 인해, 고령자의 복지관련 예산은 절대적 기준 뿐만 아니라 상대적 기준에서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백서」 등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999년에 1,917억원이었던 고령자복지관련 예산은 2009년에 31,259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정부예산대비 0.23%에서 1.59%로 증가한 수치에 해당한다.

〈표 2-2〉 노인복지 관련 예산

(단위 : 억원, %)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노인복지관련예산	1,917	2,809	3,089	3,786	4,011	5,005	3,302	3,929	5,692	20,619	31,259
정부예산대비	0.23	0.32	0.31	0.35	0.34	0.42	0.25	0.27	0.36	1.18	1.59
복지부예산대비	4.61	5.29	4.14	4.89	4.72	5.42	3.82	4.05	4.94	13.25	16.22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주요업무참고자료」, 각 년도

만일 개인이 충분한 노후준비를 한다면, 이러한 급격한 고령화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선진국과 같은 사회보장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고령화에 따른 제반 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회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고령자의 노후준비도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38만2천명(2008년 기준)으로, 수급률은 7.6%였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5.0%(10만명), 여성이 9.4%(28만1천명)로 여성의 수급률이 4.4%p만큼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들은 2007년도와 비교하여, 전체 수급자 수는 4,107명 감소하였고 성별로는 남성이 0.2%(456명), 여성이 0.5%(3,651명) 각각 감소하였음을 볼 수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수급자는 25.0%인 125만2천명(2008년 기준)으로 이는 전년도에 비해 2.6%p 증가한 수치이다. 연금 유형별로는 노령연금(89.3%)과 유족연금(10.1%)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건강보험의 65세 이상 노인의료비는 10조 4,904억원(2008년 기준)으로 전년도에 비해 15.5% 증가하여, 전체의료비 증가율(8.6%)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건강보험의 65세 이상 노인의료비가 전체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9%로 전년도의 28.2%에 비해 1.7%p 증가하였다.

〈표 2-3〉 65세 이상 고령자의 건강보험 의료비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전년대비 증감(률)
전체의료비(A)	205,336	223,559	247,968	285,580	322,590	350,366	8.6
노인의료비(B)	43,723	51,097	60,556	73,931	90,813	104,904	15.5
비율(B/A×100)	21.3	22.9	24.4	25.9	28.2	29.9	1.7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3년 건강보험심사평가통계연보」, 「2004년 건강보험심사통계지표」, 「2005~2007년 건강보험통계지표」, 「2008년 진료비통계지표」

이와 같은 지표들을 통해, 선진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이는 고령자에 대한 사회적 부담의 증가를 유발하여 이들의 경제활동참여 증가가 단순히 이들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전체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임을 암시한다.

전라북도의 현황을 살펴보면, 도내 65세 이상 고령자의 수는 277,682명(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65세 이상 고령자 수의 5.27%를 차지하며, 전북의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북의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1년의 10.67%에서 2009년 14.97%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²⁾ 전북의 전체 인구가 지

2) 전국 대비 전북의 인구비율이 3.7%임을 고려할 때, 도내 고령자 인구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을 볼 수 있다.

속적으로 감소하는데 반해, 고령자 인구는 증가하여 전북의 고령화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2-4〉 연령대별·연도별 고령인구

(단위 : 명,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인구수	증가율	인구수	증가율	인구수	증가율	인구수	증가율	인구수	증가율	인구수	증가율	
전국	전체	48,583,805	0.41	48,782,274	0.41	48,991,779	0.43	49,268,928	0.57	49,540,367	0.55	49,773,145	0.47
	60-64세	2,010,371	-0.92	1,985,434	-1.24	1,961,127	-1.22	1,956,330	-0.24	2,040,956	4.33	2,133,451	4.53
	65-69세	1,659,302	4.81	1,694,460	2.12	1,762,967	4.04	1,898,373	7.68	1,923,840	1.34	1,914,041	-0.51
	70-74세	1,119,188	6.50	1,206,036	7.76	1,293,348	7.24	1,362,964	5.38	1,440,577	5.69	1,518,328	5.40
	75-79세	705,655	7.36	748,702	6.10	791,429	5.71	842,645	6.47	892,465	5.91	959,109	7.47
	80-84세	406,810	3.92	425,870	4.69	441,484	3.67	462,981	4.87	489,692	5.77	533,874	9.02
	85-89세	167,739	4.99	179,760	7.17	192,413	7.04	213,255	10.83	236,472	10.89	249,131	5.35
	90-94세	53,818	5.34	56,312	4.63	60,589	7.60	65,380	7.91	69,124	5.73	74,664	8.01
	95이상	12,434	8.43	13,384	7.64	14,503	8.36	15,878	9.48	17,103	7.72	18,561	8.52
전북	전체	1,906,742	-2.44	1,885,335	-1.12	1,868,365	-0.90	1,862,277	-0.33	1,855,772	-0.35	1,854,508	-0.07
	60-64세	95,707	-4.81	92,785	-3.05	89,977	-3.03	86,318	-4.07	89,184	3.32	93,338	4.66
	65-69세	89,461	1.26	87,391	-2.31	88,882	1.71	96,011	8.02	93,633	-2.48	90,189	-3.68
	70-74세	66,657	5.70	71,077	6.63	74,292	4.52	76,518	3.00	78,621	2.75	80,777	2.74
	75-79세	42,529	6.29	45,511	7.01	47,495	4.36	49,423	4.06	52,125	5.47	55,959	7.36
	80-84세	24,592	0.29	24,510	-0.33	25,455	3.86	27,132	6.59	28,525	5.13	30,955	8.52
	85-89세	10,317	5.05	10,936	6.00	11,284	3.18	12,706	12.60	14,142	11.30	14,299	1.11
	90-94세	3,248	2.17	3,407	4.90	3,677	7.92	3,828	4.11	4,102	7.16	4,393	7.09
	95이상	859	5.01	889	3.49	944	6.19	1,054	11.65	1,083	2.75	1,110	2.49

자료 :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2009

2007년 기준 전라북도 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13,347명 가운데 26.3%가 65세 이상의 고령자에 속하며, 이러한 고령 수급자의 수치는 도내 65세 이상 고령자 전체 가운데 11.1%를 차지하여, 우리나라 전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령자 비중의 증가는 이들의 복지개선을 위한 사회부담의 가중을 의미한다. 나아가, 고령자의 경제활동참여 촉진을 위한 공공부문 개입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2. 여성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여성의 인구는 1980년 1,888만8천명에서 2009년 2,426만 5천명으로 537만7천명(28.5%)만큼 증가하여 524만5천명만큼 증가한 남성의 인구보다 13만2천명만큼 더 증가하였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여성의 인구가 남성의 인구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2-5〉 연령별 인구추이

(단위 : 천명)

구분	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여성〉								
2000	23,341	3,188	3,334	3,985	4,164	3,414	2,197	3,060
2005	23,947	2,758	3,113	3,673	4,163	4,028	2,567	3,646
2008	24,191	2,440	3,127	3,462	4,031	4,108	3,000	4,022
2009	24,265	2,356	3,120	3,372	3,974	4,119	3,167	4,157
〈남성〉								
2000	23,667	3,593	3,638	4,222	4,357	3,528	2,175	2,152
2005	24,191	3,021	3,486	3,913	4,372	4,181	2,571	2,647
2008	24,416	2,652	3,515	3,719	4,252	4,252	3,019	3,006
2009	24,481	2,553	3,502	3,643	4,210	4,253	3,185	3,136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각 년도

〈표 2-6〉 성별 가구주 추이

(단위 : 천 가구, 천명, %)

구분	가 구	성별 가구주 추이		
		여성가구주	남성가구주	여성가구주 비율
1980	7,969	1,169	6,801	14.7
1990	11,355	1,787	9,568	15.7
1995	12,958	2,147	10,811	16.6
2000	14,312	2,653	11,659	18.5
2005	15,971	3,467	12,504	21.7
2008	16,673	3,689	12,984	22.1
2009	16,917	3,749	13,168	22.2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주 : 2005년 이후는 「장래가구추계」 자료

2009년 기준 우리나라에는 1,691만7천 가구가 존재하며 이 가운데 여성이 가구 주인 경우는 374만9천 가구로 총 가구의 22.2%를 차지한다. 여성가구주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의 가구 수는 1980년의 3.2배, 1990년의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에 해당한다. 총 가구 가운데 여성가구주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 또한 1980년 14.7%, 2000년 18.5%, 2009년 22.2%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고령층의 가중된 경제적 부담, 고령층에서 여성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의 증가, 그리고 여성가구주 가구 비율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확대를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의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표 2-7〉 연도별·연령대별 전라북도 여성 가운데 대학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의 비율
(단위 : %)

구분	1995	2000	2005
25-29세	30.94	42.49	62.31
30-34세	23.43	32.19	46.40
35-39세	10.73	22.62	33.04
40-44세	6.62	11.36	21.46
45-49세	3.28	7.11	11.59
50-54세	1.32	3.58	5.91
55-59세	0.77	1.83	2.62
60-64세	0.82	1.32	1.52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전라북도 여성 가운데 대학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의 비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25-64세의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함을 볼 수 있는데, 특히 최근에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여성의 경우 남성에 대한 비율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유사한 수준의 학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경우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경험하여 경제활동참여에 제약이 따르며, 이는 사회전체적인 손실의 발생을 의미한다.

3. 장애인

우리나라의 장애인 수는 1995년 1,053천명(재가장애인 1,029천명, 시설장애인 24천명)에서 2000년 1,449천명(재가장애인 1,398천명, 시설장애인 51천명), 2005년 2,149천명(재가장애인 2,101천명, 시설장애인 48천명)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장애인 출현율 역시 1995년 2.35%에서 2000년 3.09%, 2005년 4.59%로 상승하고 있다.

〈표 2-8〉 장애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대비 소득인정액 분포

(단위 : %)

구분	전체	장애인 가구	비장애인 가구
전체	100.0	100.0	100.0
최저생계비 100%미만	8.5	18.3	7.2
100%이상 110%미만	0.8	1.2	0.7
110%이상 120%미만	1.1	1.4	1.1
120%이상 130%미만	0.9	1.3	0.9
130%이상 140%미만	1.0	1.1	1.0
140%이상 150%미만	1.0	1.6	0.9
150%이상 160%미만	0.8	1.3	0.8
160%이상 170%미만	0.8	1.1	0.8
170%이상 180%미만	0.9	1.4	0.8
180%이상 190%미만	0.8	1.1	0.8
190%이상 200%미만	0.9	1.0	0.9
최저생계비 200%이상	82.5	69.1	84.3

자료 : 한국장애인개발원, 『2008년 장애인백서』, 2009. (원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년 전국가구 생활실태 조사』, 2007.)

「2009 장애인 통계」에 의하면, 최저생계비 수급가구의 비율은 비장애인 가구의 경우 2.7%인 반면 장애인 가구는 11.8%로 비장애인 가구에 비해 4배 이상 높게 나타나며, 소득인정액 180% 이상인 일반 가구의 비율은 비장애인 가구가 71.9%인 반면 장애인 가구의 경우 51.8%로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³⁾ 이는 장

3)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서 계산하는데, 이때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초공제액과 부채를 차감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을 의미한다.

애인 가구의 소득수준이 비장애인 가구의 소득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의하면, 2008년말 기준 장애수당 수급자 수는 433,413명이며, 이 가운데 기초수급계층이 368,575명, 차상위 계층은 64,838명이고, 중증장애인은 194,935명으로 전체의 45.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2-9〉 장애수당 수급자 수

(단위 : 명)

구분	전체	기초			차상위		
		소계	중증	경증	소계	중증	경증
2007년	398,197	357,652	175,224	182,428	40,545	13,854	26,691
2008년	433,413	368,575	172,629	195,946	64,838	22,306	42,532

자료 : 보건복지부, 「2009 주요업무참고자료」, 2009

장애수당 지급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1999년에 예산은 22,491백만원, 수급자는 66,139명이었으며 매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예산과 수급자가 2009년에 287,036백만원과 466,389명으로 각각 증가하였다.

〈표 2-10〉 연도별 장애수당 지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분	예산액	수급자
1998년	15,729	54,669
1999년	22,491	66,139
2000년	27,656	76,899
2001년	33,125	98,628
2002년	44,780	102,539
2003년	51,864	110,606
2004년	66,449	126,061
2005년	89,683	296,565
2006년	111,931	346,024
2007년	313,032	398,197
2008년	327,891	433,413
2009년	287,036	466,389

자료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2009.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세대를 구분할 경우, 장애인세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에 19.0%로 다른 세대와 달리 유일하게 전년도대비 증가(0.9%p만큼)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장애인 인구의 증가와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들의 상대적 빈곤의 심화는 이들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회전체의 노력이 필요함을 제기한다.

〈표 2-11〉 전라북도 유형등급별 장애인 수

(단위 : 명)

장애 유형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간	23	6	29	34	5	39	34	8	42	1	1	2	87	37	124				236
간질	11	6	17	20	22	42	96	81	177	214	203	417							663
뇌병변	1,494	1,559	3,053	1,736	1,657	3,393	1,975	1,578	3,553	846	528	1,374	646	361	1,007	395	177	572	12,952
시각	805	760	1,565	224	242	466	372	368	740	322	274	596	515	445	960	4,772	2,751	7,523	11,850
신장	73	33	106	765	540	1,305	1		1	5	2	7	211	104	315				1,734
심장	8	7	15	39	31	70	207	131	338				8	1	9				432
안면	4		4	13	15	28	18	22	40	12	29	41							113
언어	1		1	70	37	107	334	107	441	309	116	425							974
자폐성 (발달)	104	27	131	154	43	197	68	9	77										405
장루				7	5	12	41	11	52	200	83	283	103	95	198				545
정신	321	243	564	1,425	1,189	2,614	1,316	1,294	2,610										5,788
지적 (정신지체)	1,461	1,178	2,639	2,230	1,610	3,840	1,846	1,189	3,035										9,514
지체	1,384	743	2,127	3,059	1,952	5,011	6,071	3,460	9,531	6,273	8,048	14,321	10,215	11,554	21,769	11,555	6,585	18,140	70,899
청각	168	138	306	1,264	1,117	2,381	1,405	1,091	2,496	1,587	1,226	2,813	1,619	1,474	3,093	1,113	871	1,984	13,073
호흡기	69	24	93	144	26	170	243	77	320				1		1			1	585
합계	5,926	4,724	10,650	11,184	8,491	19,675	14,027	9,426	23,453	9,769	10,510	20,279	13,405	14,071	27,476	17,836	10,384	28,220	129,753

주 : 2009년 6월 기준

2009년 6월 기준 전북에는 129,753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56.4%), 청각장애(10.1%), 뇌병변장애(10.0%), 시각장애(9.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등급별로는 1등급이 10,650명(전북 장애인의 8.2%), 2등급이 19,675명(15.2%), 3등급이 23,453명(18.1%)으로 조사되며, 38,068명 이상이 중증장애인으로 전라북도 전체 장애인 가운데 29% 이상을 차지한다.4)

4) 모든 장애유형의 1급 및 2급 장애인과 3급 장애인 중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 뇌병변장애,

제 2 절 취업 및 구직 현황

1. 고령자

2009년 기준 우리나라의 15세 이상 인구는 4천9만명으로, 이 가운데 2,439만명(60.8%)이 경제활동인구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2,351만명이 취업상태에 있어 고용률은 58.6%를 기록하고 있다. 취업자의 연령대별 분포는 15~29세 396만명(16.8%), 30~59세 1,686만명(71.7%), 60세 이상 269만명(11.4%)으로 조사된다.

통계청의 고령층에 대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의하면, 55~79세 취업자 가운데 산업별로는 농림어업(33.7%)과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5.2%)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며, 55~64세 취업자의 경우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9.0%)에, 65~79세의 경우 농림어업(55.1%)에 가장 많이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12〉 산업별 고령층의 취업자 현황

(단위 : 천명, %)

구분	취업자	농림어업	광공업	제조업	사회간접자본·기타서비스업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전기·운수·창고·금융업	
전 체 (55~79세)	3,952 (100.0)	1,332 (33.7)	353 (8.9)	351 (8.9)	2,267 (57.4)	252 (6.4)	757 (19.2)	995 (25.2)	262 (6.6)
55~64세	2,569 (100.0)	570 (22.2)	287 (11.2)	286 (11.1)	1,711 (66.6)	212 (8.2)	534 (20.8)	746 (29.0)	219 (8.5)
65~79세	1,383 (100.0)	762 (55.1)	66 (4.8)	65 (4.7)	556 (40.2)	40 (2.9)	223 (16.2)	249 (18.0)	43 (3.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10

직업별로는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노무직(36.4%)과 농림어업직(31.3%)에서 높은 분포를 보이며, 특히 65~79세 취업자의 경우 절반 이상이 농림어업직(51.0%)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의 이러한 산업별, 직업별 분포를 통해 이들

시각장애, 심장장애 및 상지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중증장애인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고용이 농어촌에서 주로 이뤄짐을 볼 수 있다.

〈표 2-13〉 직업별 고령층의 취업자 현황

(단위 : 천명, %)

구분	계 (취업자)	전문·기술· 행정관리직	사무직	서비스 판매직	농림 어업직	기능·기계 조작·단순 노무직	기능·기계		
							기능 ¹⁾	기계 ²⁾	단순 ³⁾
전 체 (55~79세)	3,952 (100.0)	338 (8.5)	100 (2.5)	838 (21.2)	1,238 (31.3)	1,438 (36.4)	272 (6.9)	290 (7.3)	875 (22.2)
55~64세	2,569 (100.0)	276 (10.7)	81 (3.2)	631 (24.6)	534 (20.8)	1,047 (40.7)	226 (8.8)	252 (9.8)	569 (22.1)
65~79세	1,383 (100.0)	62 (4.5)	19 (1.4)	207 (14.9)	705 (51.0)	391 (28.3)	46 (3.3)	38 (2.8)	307 (22.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10

- 주 : 1)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2) 장차,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3) 단순노무종사자

미취업상태인 고령자의 비율은 55~64세의 경우 39.6%, 65~79세의 경우 64.1%로 높게 나타났다. 55~79세 고령자 가운데 지난 1년간 구직경험이 있는 경우는 11.3%였고, 여성(8.9%)에 비해 남성(14.1%)의 구직활동 경험이 많았으며 65~79세의 경우 6.4%가 구직활동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14〉 미취업 고령자의 구직경험여부 현황

(단위 : 천명, %)

구분	계	지난 1년간 구직경험 있음	지난 1년간 구직경험 있음			지난 1년간 구직 경험없음
			한 번	두 번	세 번 이상	
전 체 (55~79세)	8,099 (100.0)	913 (11.3)	425 (5.3)	170 (2.1)	318 (3.9)	7,187 (88.7)
남성	3,706 (100.0)	524 (14.1)	223 (6.0)	99 (2.7)	201 (5.4)	3,183 (85.9)
여성	4,393 (100.0)	389 (8.9)	202 (4.6)	70 (1.6)	116 (2.6)	4,004 (91.1)
55~64세	4,251 (100.0)	667 (15.7)	291 (6.9)	130 (3.1)	246 (5.8)	3,584 (84.3)
65~79세	3,849 (100.0)	246 (6.4)	134 (3.5)	40 (1.0)	72 (1.9)	3,603 (93.6)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10

지난 1년간 구직경험이 있는 경우의 주된 구직경로는 친구·친지의 소개부탁(54.5%), 노동부 및 기타 공공 직업알선기관(11.5%), 사업체 문의 또는 방문(10.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이들의 구직활동이 주로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이뤄지며 이로 인해 이들에 대한 노동시장이 체계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고 구인과 구직에 대한 정보의 부족-특히, 고령자의 온라인 채용정보에 대한 접근의 제약-으로 인한 시장기능에 있어서의 비효율성이 존재함을 볼 수 있다. 더불어, 지난 1년간 취업경험이 있는 고령자 가운데 28.2%는 생애 주된 일자리와 관련이 없는 일자리에서 일을 한 것으로 조사되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경력의 적극적 활용에 제약을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향후 취업의사가 있는 고령자의 비율은 58.8%로, 여성에 비해 남성의 취업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래 취업의사가 있는 고령자(55-79세) 가운데 88.5%가 부족한 생활비 충당이나 일하는 즐거움을 위해 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이들의 일자리 선택기준으로는 임금수준이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며, 이밖에 일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 일의 양과 근무시간, 과거 취업 경험 연관성 등의 순으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2-15〉 향후 취업의사 및 취업동기

(단위 : 천명, %)

구분	계	장래 근로 원함	장래 근로 원하지 않음						장래 근로 원하지 않음
			일하는 즐거움	생활비 보탬	사회가 필요로함	건강 유지	무료 해서	기타	
55-79세 고령자	8,099 (100.0)	4,766 (58.8)	1,652 (20.4)	2,566 (31.7)	97 (1.2)	127 (1.6)	303 (3.7)	22 (0.3)	3,333 (41.2)
남성	3,706 (100.0)	2,698 (72.8)	1,056 (28.5)	1,340 (36.2)	86 (2.3)	79 (2.1)	128 (3.5)	9 (0.2)	1,008 (27.2)
여성	4,393 (100.0)	2,069 (47.1)	596 (13.6)	1,226 (27.9)	11 (0.2)	48 (1.1)	175 (4.0)	13 (0.3)	2,325 (52.9)
55~64세	4,251 (100.0)	3,103 (73.0)	1,020 (24.0)	1,765 (41.5)	79 (1.9)	63 (1.5)	158 (3.7)	16 (0.4)	1,149 (27.0)
65~79세	3,849 (100.0)	1,665 (43.3)	632 (16.4)	801 (20.8)	17 (0.4)	64 (1.6)	146 (3.8)	6 (0.2)	2,184 (56.7)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10

학력이 중졸이하인 경우에는 임금수준이 장래 일자리 선택기준으로 가장 중요

한 반면, 학력이 높아질수록 일자리 선택기준으로서 임금수준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대출이상인 경우 계속 근로할 수 있는 가능성, 일의 내용, 과거 취업 경험 연관성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짐을 볼 수 있다.

〈표 2-16〉 향후 일자리 선택기준

(단위 : 천명, %)

구분	계	임금수준	일의 양과 시간대	일의 내용	출퇴근 거리 등 편리성	계속 근로 가능성	과거 취업 경험 연관성	그 외
장래근로 희망자	4,766 (100.0)	2,412 (50.6)	622 (13.1)	343 (7.2)	171 (3.6)	681 (14.3)	407 (8.5)	130 (2.7)
남성	2,698 (100.0)	1,277 (47.3)	279 (10.3)	222 (8.2)	95 (3.5)	450 (16.7)	281 (10.4)	94 (3.5)
여성	2,069 (100.0)	1,135 (54.9)	344 (16.6)	121 (5.9)	76 (3.7)	230 (11.1)	126 (6.1)	36 (1.7)
중졸이하	3,257 (100.0)	1,798 (55.2)	421 (12.9)	180 (5.5)	104 (3.2)	450 (13.8)	251 (7.7)	54 (1.7)
고졸	1,058 (100.0)	495 (46.8)	151 (14.2)	88 (8.3)	48 (4.5)	154 (14.6)	88 (8.3)	35 (3.3)
대출이상	451 (100.0)	120 (26.6)	51 (11.4)	75 (16.6)	20 (4.3)	76 (16.9)	69 (15.2)	41 (9.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10

〈표 2-17〉 희망 임금수준

(단위 : 천명, %)

구분	계	월평균 50만원미만	월평균 50~100만원미만	월평균 100~150만원미만	월평균 150~300만원미만	월평균 300만원 이상
장래 근로 희망자	4,766 (100.0)	544 (11.4)	1,961 (41.1)	1,359 (28.5)	717 (15.1)	186 (3.9)
남성	2,698 (100.0)	153 (5.7)	844 (31.3)	941 (34.9)	596 (22.1)	164 (6.1)
여성	2,069 (100.0)	391 (18.9)	1,117 (54.0)	417 (20.2)	122 (5.9)	22 (1.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10

희망하는 임금수준으로는 월평균 50~100만원이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나, 성별로 구분할 때 남성이 월평균 100~150만원을 가장 희망하는 반면 여성의 경우 과반수 이상이 월평균 50~100만원의 임금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희망하는 일자리 형태를 보면, 55-79세 고령자 가운데 72.8%가 시간제보다는

전일제를 희망하는 반면, 이들 가운데 연령이 높을수록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선호가 높아짐을 볼 수 있다.

〈표 2-18〉 희망 일자리 형태

(단위 : %)

연령별	전체(55~79세)	55~59세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전일제	72.8	79.6	75.7	67.5	60.3	49.2
시간제	27.2	20.4	24.3	32.5	39.6	50.9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10

〈표 2-19〉 고령층의 경제활동 현황

(단위 : 천명, %)

구분	항목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전국	계	경제활동인구	22,134	22,471	22,921	22,957	23,417	23,743	23,978	24,216	24,347	24,394
		비경제활동인구	14,052	14,108	14,042	14,383	14,300	14,557	14,784	14,954	15,251	15,698
		경제활동참가율	61.2	61.4	62.0	61.5	62.1	62.0	61.9	61.8	61.5	60.8
		고용률	58.5	59.0	60.0	59.3	59.8	59.7	59.7	59.8	59.5	58.6
	60-64세	경제활동인구	986	1,020	1,066	1,017	1,032	1,052	1,093	1,130	1,127	1,170
		비경제활동인구	831	840	841	913	892	876	867	877	919	955
		경제활동참가율	54.3	54.8	55.9	52.7	53.7	54.5	55.8	56.3	55.1	55.1
		고용률	53.0	53.7	55.0	51.8	52.7	53.4	54.5	55.0	54.1	53.8
	65세이상	경제활동인구	1,006	1,075	1,161	1,146	1,252	1,361	1,445	1,524	1,541	1,564
		비경제활동인구	2,389	2,509	2,621	2,841	2,943	3,170	3,291	3,348	3,497	3,640
		경제활동참가율	29.6	30.0	30.7	28.7	29.8	30.0	30.5	31.3	30.6	30.1
		고용률	29.4	29.9	30.5	28.6	29.6	29.8	30.3	31.1	30.3	29.7
전북	계	경제활동인구	870	878	863	860	846	848	850	848	848	842
		비경제활동인구	623	607	610	598	599	595	578	557	564	577
		경제활동참가율	58.3	59.2	58.6	59.0	58.5	58.8	59.5	60.3	60.1	59.3
		고용률	56.5	57.3	57.1	57.4	56.9	57.3	58.0	59.0	58.7	58.2
	60-64세	경제활동인구	60	61	61	57	55	54	52	53	54	53
		비경제활동인구	37	36	36	39	38	37	37	36	35	38
		경제활동참가율	61.9	62.9	62.9	59.1	58.7	59.4	58.6	59.8	60.9	58.3
		고용률	61.9	62.9	62.9	58.7	58.4	59.4	58.5	59.4	60.5	58.1
	65세이상	경제활동인구	79	83	82	83	86	87	98	105	107	106
		비경제활동인구	134	138	146	153	156	170	162	155	158	164
		경제활동참가율	37.1	37.6	36.0	35.0	35.6	34.0	37.7	40.2	40.5	39.2
		고용률	37.1	37.6	36.0	35.0	35.5	33.9	37.6	40.1	40.4	39.1

자료 :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2009

2009년 기준 전북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9.3%로 전국에 비해 다소 낮으나,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9.2%로 전국의 30.1%보다 9.0%p만큼 오히려 더 높고 이들의 고용률 역시 39.1%로 전국의 29.7%에 비해 9.4%p만큼 높게 나타난다.

전라북도 노인일자리추진본부를 통해 2009년 취업한 고령자의 수는 312명으로, 이 가운데 26%가 남성이었으며, 연령별 취업자 수는 61-65세 157명, 66-70세 84명, 60세 이하 45명, 71-75세 23명 등으로 나타났고 이들의 평균연령은 63.7세로 도내 고령자들의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함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취업자 대부분이 학교청소나 시험감독과 같은 한시적인 일자리를 얻는 것에 한정되어 이들의 취업에 대한 만족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2. 여성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고 결혼과 출산을 전후하여 경제활동참가율이 급격히 저하되는 경력단절현상(M-curve현상) 역시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대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2.4%(2006년 기준)로 OECD 회원국들의 평균인 82.5% 보다 20.1%p만큼 낮을 뿐만 아니라 OECD 회원국 가운데 최저 수준에 그친다. 2008년 경제활동인구는 24,347천명이며, 이중 여성은 10,139천명으로 41.6%를 차지하였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0.0%로 전년에 비해 0.2%p 하락하여 전년에 이어 감소세가 지속됨을 볼 수 있다. 최근의 자료에 따르면, 대졸 여성은 출산과 육아로 인한 재취업에 있어 상대적으로 학력수준이 낮은 여성에 비해 보다 큰 어려움을 겪는 L-curve현상을 보인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학력이 높을수록 구하는 직장이 보다 전문화되고 기대임금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일자리에 대한 상대적으로 낮은 공급이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보다 전문화된 직무의 급변성은 담당 근로자의 업무에 대한 지속성을 요하기 때문에 고학력 여성일수록 재취업에 어려움이 클 것이다. 더불어, 경제활동참가율의 남녀 차이는 1998년의 28.0%p에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2008년에는 23.5%p까지 좁혀짐을 볼 수 있다.

〈표 2-20〉 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단위 : 천명, %, %p)

구분	전 체		여 성		남 성		남녀 차 (참가율)
	인 구	참가율	인 구	참가율	인 구	참가율	
1998	21,428	60.6	8,576	47.1	12,852	75.1	28.0
2000	22,134	61.2	9,101	48.8	13,034	74.4	25.6
2003	22,957	61.5	9,418	49.0	13,539	74.7	25.7
2005	23,743	62.0	9,860	50.1	13,883	74.6	24.5
2006	23,978	61.9	10,001	50.3	13,978	74.1	23.8
2007	24,216	61.8	10,092	50.2	14,124	74.0	23.8
2008	24,347	61.5	10,139	50.0	14,208	73.5	23.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보고서」, 각 년도

주 : 2000년 이후 실업자의 구직기간이 4주 기준으로 변경되었음

2008년 여성의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은 25~29세에서 69.3%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40~44세, 45~49세의 참가율은 각각 65.9%, 65.8%로 25~29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30~34세, 35~39세는 각각 53.3%, 58.5%로 비교적 낮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1998년과 비교해 볼 때 특히, 25~29세는 크게 증가하고, 20~24세는 오히려 감소함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여성의 대학진학률 및 평균 초혼연령의 지속적인 상승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 2-21〉 여성의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

구분	전 체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세 이상
1995	48.4	14.5	66.1	47.9	47.6	59.2	65.7	60.6	58.8	54.1	28.7
1998	47.1	11.9	61.1	51.5	47.5	58.6	63.6	61.5	55.3	51.4	27.9
2000	48.8	12.6	61.2	55.9	48.8	59.3	63.8	64.9	55.3	51.3	30.2
2005	50.1	10.3	62.6	66.1	50.2	59.0	65.6	63.1	58.3	49.1	28.1
2007	50.2	8.1	56.4	68.2	53.7	58.6	66.6	65.0	59.3	50.6	28.7
2008	50.0	7.5	54.6	69.3	53.3	58.5	65.9	65.8	60.3	52.5	27.9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보고서」, 각 년도

〈표 2-22〉 취업자의 성별·종사상지위별 구성비

(단위 : %)

	취업자	비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상용	임시	일용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여성〉								
1998	100.0	41.3	19.1	22.2	58.7	20.4	27.9	10.4
2003	100.0	34.4	17.8	16.7	65.6	23.2	31.0	11.4
2007	100.0	31.2	18.5	12.7	68.8	28.7	29.9	10.2
2008	100.0	30.4	18.0	12.5	69.6	29.9	29.7	9.9
〈남성〉								
1998	100.0	36.3	34.3	1.9	63.7	41.2	15.1	7.4
2003	100.0	35.3	34.0	1.3	64.7	39.6	16.7	8.4
2007	100.0	32.3	31.1	1.2	67.7	42.7	16.4	8.7
2008	100.0	31.9	30.6	1.2	68.1	44.2	15.6	8.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보고서」, 각 년도

2008년 여성 취업자의 임금근로자 비중은 69.6%이며 이 가운데 상용근로자는 29.9%, 임시근로자는 29.7%, 일용근로자는 9.9%이며, 임금근로자 비중은 높아지나 임시와 일용근로자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이를 보인다.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30.4%로서, 이 중 자영업주 18.0%,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은 12.5%이며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남성 취업자와 비교할 때 임금근로자 가운데 임시근로자 비중과 비임금근로자 가운데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이 각각 14.1%p, 11.3%p만큼 높음을 볼 수 있다.

2008년 여성 취업자 중 전문·기술·행정관리직 종사자 비율은 19.8%로 전년대비 1.1%p 상승하였으며,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1998년과 비교해 볼 때 여성취업자는 22.1% 증가하였고, 전문·기술·행정관리직 종사자는 6.5%p만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남녀의 전문·기술·행정관리직 종사자 비율은 1998년에 9.2%p 차이가 났으나, 2008년에는 1.9%p로 여성의 전문·기술·행정관리직 종사자 비율이 계속 증가하여 남녀차가 줄어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2-23〉 전문·기술·행정관리직 종사자 비율

(단위 : 천명, %)

구분	여성 취업자	전문·기술·행정관리직 종사자 비율		
		전문·기술·행정관리직 종사자 비율	남성 취업자	전문·기술·행정관리직 종사자 비율
1998	8,090	13.3	11,847	22.5
2000	8,769	14.0	12,387	21.9
2005	9,526	17.0	13,330	19.3
2007	9,826	18.7	13,607	20.7
2008	9,874	19.8	13,703	21.7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보고서」, 각 년도

주 : 전문·기술·행정관리직 종사자는 관리자과 전문 및 관련 종사자를 칭함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꾸준히 상승하여 2000년대 중반부터는 50% 수준을 유지해 오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남녀간 차이도 23.5%p(2008년)로 좁혀진 상태이다. 2000년대 중반 이전까지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20대 후반과 30대 전반 여성에서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경력단절현상이 나타나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초혼연령의 상승에 따라 30대 여성의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출산과 육아에 의한 경력단절현상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여성취업자의 경우 종사상지위측면에서 임금근로자-특히, 상용근로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문·기술·행정관리직 종사자 비율 또한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여성의 활발한 경제활동참여에도 불구하고, 최근 남성에 비해 여성의 고용은 크게 악화되고 있으며, 이는 경기침체로 인해 기업들이 여성 인력을 우선 감축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취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부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2008년 기준 전라북도 내 15세 이상 여성의 인구는 약 73만2천명으로, 이 가운데 49.7%가 경제활동에 참여하여 남성에 비해 21.2%p가량 낮고 우리나라 전체 여성에 비해서는 0.2%p만큼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인다. 전북의 여성 고용률은 48.8%로 전국 여성 고용률 46.4%에 비해 2.4%p만큼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2-24〉 전북 성별 경제활동인구

(단위 : 천명, %)

성별	항목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계	15세이상인구	1,458	1,481	1,493	1,472	1,445	1,405	1,412
	경제활동인구	882	867	869	862	843	849	847
	비경제활동인구	576	614	624	611	601	578	565
	경제활동참가율	60.5	58.5	58.2	58.6	58.4	59.5	60.0
	실업률	-	-	-	-	-	2.4	2.1
	고용률	-	-	-	-	-	58.0	58.7
남자	15세이상인구	693	707	713	703	689	684	680
	경제활동인구	490	507	497	492	489	479	484
	비경제활동인구	203	200	216	210	200	205	196
	경제활동참가율	70.7	71.7	69.7	70.0	70.9	70.0	71.1
	실업률	-	-	-	-	-	3.2	2.4
	고용률	-	-	-	-	-	67.8	69.4
여자	15세이상인구	765	774	779	770	756	744	732
	경제활동인구	391	361	371	369	355	371	363
	비경제활동인구	373	414	408	400	401	373	368
	경제활동참가율	51.1	46.6	47.6	47.9	46.9	49.8	49.7
	실업률	-	-	-	-	-	1.5	1.8
	고용률	-	-	-	-	-	49.1	48.8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보고서」, 각 년도

전북 여성의 학력별 취업자는 중졸이하가 143천명, 고졸 108천명, 대졸이상이 88천명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취업자 비율은 낮게 나타나, 고학력 여성의 실업 및 비경제활동인구화의 심각성이 대두된다.

전라북도 거주 여성의 산업별 취업분포를 보면, 2008년 기준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에 242천명(67.8%), 농림·어업에 81천명(22.7%), 광공업에 34천명(9.5%)이 종사한다. 우리나라 전체 여성의 산업별 취업비율이 79.2%(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7.9%(농림·어업), 12.9%(광공업)임을 고려할 때, 전라북도 거주 여성의 고용이 농림·어업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이뤄지고 다른 산업분야-특히,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분야-에서는 전국에 비해 고용이 덜 이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2-25〉 전북 산업별 취업자 수

(단위 : 천명,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여성비율
전체	829 (100.0)	472 (100.0)	357 (100.00)	43.1
농림·어업	174 (21.0)	93 (19.7)	81 (22.7)	46.6
광공업	97 (11.7)	63 (13.3)	34 (9.5)	35.1
제조업	97 (11.7)	63 (13.3)	34 (9.5)	35.1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558 (67.3)	316 (66.9)	242 (67.8)	43.4
건설업	69 (8.3)	61 (12.9)	8 (2.2)	11.6
도소매·숙박	172 (20.7)	75 (15.9)	97 (27.2)	56.4
전기·운수·통신·금융	74 (8.9)	55 (11.7)	19 (5.3)	25.7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244 (29.4)	125 (26.5)	119 (33.3)	48.8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2008

주 : 2008년 기준

직업별로는 5개 부문-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에서 남성의 직업별 분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낸다.

〈표 2-26〉 전북 직업별 취업자 수

(단위 : 천명, %)

구분	전체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 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전체	829 (100.0)	15 (1.8)	103 (12.4)	92 (11.1)	88 (10.6)	103 (12.4)	164 (19.8)	77 (9.3)	85 (10.3)	103 (12.4)
남성	472 (100.0)	14 (3.0)	50 (10.6)	55 (11.7)	25 (5.3)	47 (10.0)	91 (19.3)	61 (12.9)	75 (15.9)	54 (11.4)
여성	357 (100.0)	1 (0.3)	53 (14.8)	38 (10.6)	63 (17.6)	56 (15.7)	73 (20.4)	16 (4.5)	10 (2.8)	49 (13.7)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2008

주 : 2008년 기준

3. 장애인

우리나라 전체 15세 이상의 장애인 인구는 2,071,596명(2008년 기준)이며, 이 가운데 41.1%가 경제활동에 참여하여 91.7%가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005년의 수치와 비교하면,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 취업률, 고용률 모두 나아졌음을 볼 수 있으나, 비장애인을 포함하는 전체 인구에 대한 수치와 비교해서는 여전히 상당히 낮음을 볼 수 있다.

〈표 2-27〉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단위 : 명, %)

연도	성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취업률	실업률	고용률
			계	취업자	실업자					
2005	장애인구	2,036,788	777,159	694,955	82,204	1,259,629	38.2	89.4	10.6	34.1
	남성	1,213,801	591,930	528,508	63,422	621,871	48.8	89.3	10.7	43.5
	여성	822,987	185,229	166,447	18,782	637,758	22.5	89.9	10.1	20.2
	전체인구	38,300,000	23,743,000	22,856,000	887,000	14,557,000	62.0	96.3	3.7	59.7
	남성	18,617,000	13,883,000	13,330,000	553,000	4,734,000	74.6	96.0	4.0	71.6
	여성	19,683,000	9,860,000	9,526,000	334,000	9,823,000	50.1	96.6	3.4	48.4
2008	장애인구	2,071,596	850,837	780,054	70,783	1,220,759	41.1	91.7	8.3	37.7
	남성	1,209,706	631,195	575,580	55,615	578,511	52.2	91.2	8.8	47.6
	여성	861,890	219,642	204,474	15,168	642,248	25.5	93.1	6.9	23.7
	전체인구	39,598,000	24,347,000	23,577,000	769,000	15,251,000	61.5	96.8	3.2	59.5
	남성	19,325,000	14,216,991	13,703,000	504,000	5,108,009	73.6	96.4	3.5	70.9
	여성	20,273,000	10,130,009	9,874,000	265,000	10,142,991	50.0	97.5	2.6	48.7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장애인 실태조사』, 200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장애인 실태조사』, 2009

한국노동연구원, 『2009 KLI 노동통계』, 2009 (원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 1) OECD기준, 즉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경제활동판단기준(실업자(4주간 구직기간))으로 제시함

2)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인구)×100

3) 취업률 = (취업자/경제활동인구)×100

4) 실업률 = (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5) 고용률 = (취업자/15세 이상 인구)×100

장애유형별로는 안면장애와 지체장애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 자폐성장애와 정신장애를 지닌 경우에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모두에서 낮게 나타난다. 2005년과 비교하여, 언어장애를 지닌 장애인

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 2-28〉 장애인의 장애유형별 경제활동상태

(단위 : 명, %)

연도	장애유형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취업률	실업률	고용률
			계	취업자	실업자					
2005	지체	991,111	489,160	437,419	51,741	501,951	49.4	89.4	10.6	44.1
	뇌병변	255,928	24,497	22,257	2,240	231,431	9.6	90.9	9.1	8.7
	시각	216,809	96,435	83,770	12,665	120,374	44.5	86.9	13.1	38.7
	청각	224,079	88,653	81,452	7,201	135,426	39.6	91.9	8.1	36.4
	언어	17,097	8,798	7,959	839	8,299	51.5	90.5	9.5	46.6
	지적	90,615	21,774	18,973	2,801	68,841	24.0	87.1	12.9	20.9
	자폐성	7,303	421	421	0	6,882	5.8	100.0	0.0	5.8
	정신	77,180	13,473	12,302	1,171	63,707	17.5	91.3	8.7	15.9
	신장	40,286	9,556	8,037	1,519	30,730	23.7	84.1	15.9	20.0
	심장	39,754	7,515	5,954	1,561	32,239	18.9	79.2	20.8	15.0
	호흡기	29,953	5,912	5,912	0	24,041	19.7	100.0	0.0	19.7
	간	13,069	1,525	1,525	0	11,544	11.7	100.0	0.0	11.7
	안면	3,987	1,757	1,757	0	2,230	44.1	100.0	0.0	44.1
	장루·요루 간질	15,466 14,151	5,146 2,537	5,146 2,071	0 466	10,320 11,614	33.3 17.9	100.0 81.6	0.0 18.4	33.3 14.6
2008	지체	1,124,524	569,516	525,629	43,887	555,008	50.7	92.3	7.7	46.7
	뇌병변	211,976	25,579	23,745	1,834	186,397	12.1	92.8	7.2	11.2
	시각	217,306	99,478	89,384	10,094	117,828	45.8	89.9	10.2	41.1
	청각	203,067	86,798	80,778	6,020	116,269	42.7	93.1	6.9	39.8
	언어	14,024	4,862	4,266	596	9,162	34.7	87.7	12.3	30.4
	지적	107,359	26,965	24,122	2,843	80,394	25.1	89.5	10.5	22.5
	자폐성	4,044	400	354	46	3,644	9.9	88.5	11.5	8.8
	정신	84,552	9,784	8,358	1,426	74,768	11.6	85.4	14.6	9.9
	신장	48,283	11,284	9,331	1,953	36,999	23.4	82.7	17.3	19.3
	심장	13,771	3,355	2,808	547	10,416	24.4	83.7	16.3	20.4
	호흡기	14,393	2,679	2,387	292	11,714	18.6	89.1	10.9	16.6
	간	6,249	2,109	1,871	238	4,140	33.8	88.7	11.3	29.9
	안면	2,071	1,356	1,171	185	715	65.5	86.4	13.6	56.5
	장루·요루 간질	11,280 8,698	3,748 2,925	3,490 2,361	258 564	7,532 5,773	33.2 33.6	93.1 80.7	6.9 19.3	30.9 27.1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장애인 실태조사』, 200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장애인 실태조사』, 2009

주 : OECD기준, 즉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경제활동판단기준(실업자(4주간
구직기간))으로 제시함

장애인의 의무고용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고용률은 1.73%이며 부문별로는 공공기관에서의 고용률이 2.05%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반면 민간기업에서의 고용률이 1.70%로 가장 낮게 나타난다. 노동부의 설문에 의하면, 대부분의 기업이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주된 이유는 장애인에게 적합한 업무 부족(39.6%), 작업 중 안전의 우려(23.3%), 장애인에 적합한 시설이나 장비부족(14.1%) 등으로 조사된다(노동부, 2006).

〈표 2-29〉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단위 : 개소, 명, %)

구분	대상업체수	상시근로자	고용의무인원	장애인 근로자	고용률
전체	22,106	6,035,950	111,043	104,132	1.73
정부부문	79	824,164	16,526	14,468	1.76
민간부문	22,027	5,211,786	94,517	89,664	1.72
공공기관	253	288,225	5,645	5,899	2.05
민간기업	21,774	4,923,561	88,872	83,765	1.70

자료 : 노동부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8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2009

- 주 : 1) 대상사업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고용의무의 주체단위를 말함
 2) 2006년부터 정부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직종을 확대하고, 민간부문의 업종별 적용제외율을 폐지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으며 이에 근거하여 고용률이 산출되었음
 3) 2008년 12월 말 기준임

민간부문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은 1998년에 0.54%, 2003년에 1.08%, 2008년에 1.72%로, 2006년을 제외하고 1990년 이래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03년까지는 월평균 상시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2004년부터 50인 이상의 사업체로 확대되었으며, 실제로 장애인 고용률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규모가 큰 사업체보다 50-299인의 상시근로자를 가진 작은 규모의 사업체에서 더 높고 그 격차 또한 2003년의 0.15%p에서 2008년의 0.35%p로 점차 커지는 추세를 보인다.

2008년말 기준 민간부문 장애인 근로자 가운데 중증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17.8%에 불과하고 상시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할 경우 이들

중증장애인의 고용비율은 14.7%로 더욱 낮아짐을 볼 수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들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실제 고용으로 연결되기까지는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

2009년 12월에서 2010년 2월 사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고용포털에 등록된 전북거주 552명의 장애인 구직자 가운데 19.2%가 장애등급 1급 혹은 2급의 중증장애인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들 중증장애인 가운데 44.3%가 전혀 일을 해본 경험이 없음을 고려할 때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통한 이들의 근로의욕 고취 및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⁵⁾

〈표 2-30〉 민간부문 장애인 근로자 구성

(단위 : 명, %)

구분	전체	성별		장애정도	
		남성	여성	경증	중증
전체	89,664 (100.0)	78,079 (87.1)	11,585 (12.9)	73,731 (82.2)	15,933 (17.8)
50-299인	40,513 (100.0)	34,943 (86.2)	5,570 (13.8)	31,809 (78.5)	8,704 (21.5)
300인 이상	49,151 (100.0)	43,136 (87.8)	6,015 (12.2)	41,922 (85.3)	7,229 (14.7)

자료 : 노동부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8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2009
 주 : 2008년 말 기준

산업별로 장애인의 고용분포(2008년 기준)를 보면,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에 속하는 사업체의 18.4%가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는 1.3%의 사업체만이 장애인을 고용하여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낸다.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56,929개의 사업체 가운데 39.4%가 제조업에 속하며, 그 다음으로 도매 및 소매업이 13.1%로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면, 운수업에서 2.70%의 장애인 고용률로 가장 높은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과 건설업에서 각각 0.47%와 0.59%로 상대적으로 낮음

5) 중증장애는 그 정의상 장애정도가 심해 스스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를 나타내며, 우리나라의 경우 법적으로는 장애인복지법 등에서 정하는 장애등급 1급과 2급, 그리고 일부 장애(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정신지체, 발달장애, 정신장애, 심장장애, 지체장애)의 3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을 볼 수 있다. 153,419명의 장애인 근로자 가운데 41.2%가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사업서비스업과 운수업에서 각각 12.3%와 11.3%로 높은 비중을 나타낸다.

장애인 고용은 산업별로 큰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산업별로 장애인에 적합한 직무나 작업환경이 산업별로 상이함에 기인한다. 따라서,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은 산업별 특성에 대한 고려가 없이 획일적으로 기획·추진되 기보다는 개별 산업의 특성 및 산업간 상이함을 고려한 차별화를 통해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표 2-31〉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산업별 장애인 고용현황

(단위 : 개소, %, 명)

구분	사업체				상시근로자			
	전체	장애인고용사업체			전체	장애인근로자		
		사업체수	비율	해당산업 내 비율		근로자수	비율	고용률
전체	1,160,237	56,929	100.0	4.9	12,253,036	153,419	100.0	1.25
농업 및 임업·어업	716	35	0.1	4.9	20,098	302	0.2	1.50
광업	813	77	0.1	9.5	10,255	98	0.1	0.95
제조업	199,985	22,406	39.4	11.2	3,683,484	63,197	41.2	1.72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245	45	0.1	18.4	19,683	275	0.2	1.40
건설업	58,632	3,033	5.3	5.2	1,145,094	6,804	4.4	0.59
도매 및 소매업	270,335	7,444	13.1	2.8	1,466,586	11,043	7.2	0.75
숙박 및 음식점업	254,431	3,256	5.7	1.3	859,893	4,003	2.6	0.47
운수업	25,123	3,330	5.8	13.3	645,659	17,402	11.3	2.70
통신업	3,660	117	0.2	3.2	77,727	1,407	0.9	1.81
금융 및 보험업	8,592	859	1.5	10.0	437,290	4,122	2.7	0.94
부동산 및 임대업	28,107	1,086	1.9	3.9	211,922	2,383	1.6	1.12
사업서비스업	59,392	4,705	8.3	7.9	1,474,232	18,945	12.3	1.29
교육서비스업	61,471	2,419	4.3	3.9	739,062	6,476	4.2	0.88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63,698	2,857	5.0	4.5	779,152	6,585	4.3	0.85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44,368	924	1.6	2.1	210,618	1,487	1.0	0.71
기타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80,670	4,336	7.6	5.4	472,280	8,891	5.8	1.88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8년 사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 2009

주 : 농업 및 임업과 어업은 사례 수가 적어 합산하여 추정

지역별 장애인 고용의 분포(2008년 기준)를 보면,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가운데 3.6%가 전라북도에 소재하며 이들 가운데 5.8%가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 더불어, 수도권이나 광역시권 소재 사업체 가운데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체의 비율이 각각 4.5%와 4.8%임을 고려할 때 전라북도의 장애인 고용 사업체의 비율은 비교적 높은 편에 해당한다.⁶⁾ 종사자 수에서는 전라북도 소재 사업체가 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3.3%를 차지하는 반면, 도내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1.89%로 강원도(2.29%)와 전라남도(1.98%)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⁷⁾

〈표 2-32〉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지역별 장애인 고용현황

(단위 : 개소, %, 명)

구분	사업체				상시근로자			
	전체 사업체수	장애인고용 사업체수	전체사업체 비율	고용사업체 비율	전체 근로자수	장애인 근로자수	전체근로자 비율	장애인 고용률
전체	1,160,237	56,929	100.0	4.9	12,253,036	153,419	100.0	1.25
서울	308,115	12,489	21.9	4.1	4,521,020	42,872	27.9	0.95
부산	89,420	4,417	7.8	4.9	766,930	10,856	7.1	1.42
대구	62,394	2,672	4.7	4.3	498,781	7,366	4.8	1.48
인천	55,317	2,954	5.2	5.3	553,370	7,676	5.0	1.39
광주	33,968	1,225	2.2	3.6	287,858	3,600	2.3	1.25
대전	30,163	1,809	3.2	6.0	281,293	4,905	3.2	1.74
울산	22,166	1,340	2.4	6.0	285,692	4,470	2.9	1.56
경기	256,369	12,388	21.8	4.8	2,491,023	29,860	19.5	1.20
강원	33,613	1,985	3.5	5.9	214,795	4,914	3.2	2.29
충북	31,344	2,453	4.3	7.8	274,158	5,096	3.3	1.86
충남	39,203	1,978	3.5	5.0	355,559	4,256	2.8	1.20
전북	35,456	2,071	3.6	5.8	269,768	5,108	3.3	1.89
전남	36,276	2,197	3.9	6.1	273,487	5,418	3.5	1.98
경북	54,142	2,740	4.8	5.1	486,659	6,981	4.6	1.43
경남	72,292	4,211	7.4	5.8	692,641	10,042	6.5	1.45
수도권	619,800	27,831	48.9	4.5	7,565,414	80,408	52.4	1.06
광역시권	238,111	11,463	20.1	4.8	2,120,554	31,197	20.3	1.47
기타지역	302,326	17,635	31.0	5.8	2,567,068	41,814	27.3	1.63

자료 : 2008년 사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9

주 :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하며, 광역시권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광역시를 포함함

- 6) 장애인고용사업체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광역시와 도)는 7.8%를 나타내는 충청북도이며, 대전시, 울산시, 강원도, 전라남도, 경상남도가 전라북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 7) 장애인고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도로 2.29%를 나타낸다.

4. 시사점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최근에 급속히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의 지속은 우리나라를 2018년에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전환케 하여 노인복지에 대한 예산비중의 확대를 통해 사회전체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2007년 기준 전라북도 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13,347명 가운데 26.3%가 65세 이상의 고령자에 속하며, 이러한 고령 수급자의 수치는 도내 65세 이상 고령자 전체 가운데 11.1%를 차지함을 볼 수 있다. 고령자의 상당수는 여전히 경제활동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계속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경제활동 기회는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더욱이, 이러한 고령 구직자의 상당수가 노후에 대한 대비가 불충분함을 고려할 때, 이들의 일자리마련에 대한 공공의 시도가 요구된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를 테면, 고령층에서의 여성인구 비율, 여성가구주 비율, 그리고 대학재학 이상의 학력소유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냄을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비율 역시 증가하고 있으나, 기혼여성의 경우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력의 단절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경력의 단절은 이들의 노동시장 재진입에 대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학력수준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제활동의 제약-특히,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기회의 제한-은 사회 전체적인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암시한다. 최근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기회 증대를 위한 공공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함을 나타낸다.

전라북도의 도내 인구대비 장애인 인구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2008년에 6.50%로 나타나지만, 이들의 고용은 크게 증가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기업체의 장애인 채용에 대한 부정적 시각 및 추가비용 부담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 장애인 의무고용이 여전히 저조한 형편이다. 도내 장애인 가운데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상당수가 중증장애인이고 취업에 대한 경험이 없는 경우도 다수이며 민간 기업에서 이들에 대한 고용을 꺼리는 주된 이유가 장애인에게 적합한 업무의 부족임을 감안할 때 이들의 고용촉진을 위한 공공의 개입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제 3 장

사회적 일자리 사업 현황

- 제 1 절 중앙정부 사회적 일자리 사업
- 제 2 절 전라북도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
- 제 3 절 외국의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사업

제 3 장 사회적 일자리 사업 현황

제 1 절 중앙정부 사회적 일자리 사업

1.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전반

정부의 탈빈곤 정책은 1990년대 후반의 외환위기 이전 빈곤층, 실업층, 그리고 노동시장에 편입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로사업, 외환위기 이후의 공공근로사업,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의 자활사업을 포함한다. 2003년부터 실시된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도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표로 시작하였다.⁸⁾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 시장에서 제공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의 창출, 수익 창출을 통한 지속 가능성을 목표로 노동, 복지, 문화, 교육,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되어 왔다. 주요 사업으로 공공근로 민간위탁사업, 특별취로사업,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 제안사업 등을 통해 무료 간병인 사업, 숲 가꾸기 사업, 재활용사업 등이 포함되었다 (김영철·이민환, 2007).

지금까지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서 가장 집중해 온 부문은 장애인, 노인보호, 저소득 자녀보육 등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사회서비스 부문이다. 이것은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정책의 목표 중 하나가 사회서비스의 원활한 공급이라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이다. 이와 같이 사회서비스 부문에 집중되어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회서비스 부문이 일의 성격상 노동 집약적 특성을 갖기 때문에 상당한 고용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서비스 부문은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라 그 수요가 확대되는 정상재(normal good)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라는 측면과 고용의 질적인 측면 모두에서 바람직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사회적 일자리에서 사회서비스 부문이

8) 노동부는 사회적일자리사업에 대해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수익성 등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보건·사회복지·교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비영리단체 등에 의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산업과 달리 사회서비스 부문은 시장원리와 이익 추구의 원리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부분들이 있으며 특히 서비스의 공급 주체가 매우 다양한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⁹⁾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시행 초기(2003년 노동부에 의한 사회적일자리 사업)에 는 이를 통해 창출된 일자리가 정부의 재정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저임금의 공공 근로 형태의 일자리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2005년부터 사업유형을 ‘공익형’과 ‘수익형’으로 구분하고 공익형 사업은 원칙적으로 1년 지원에 한정하는 반면 수익형 사업은 사업선정 심사시 가점을 받음은 물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간 지원받도록 함으로써 수익형 사업의 비중을 높이려고 노력하였다. 더불어, 사업규모에 대한 한도(최소 10인)를 설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이 적은 소규모 사업은 배제되도록 하였다.

2006년에는 기업과 NGO 혹은 여기에 지자체가 포함된 협력체를 구성하여 대규모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중장기적으로 자립을 지향하는 기업연계형 프로젝트 사업과 광역형 사업모델을 발굴·확산하였다.

노동부에 의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2003년 처음으로 시작된 이후 다수의 부처가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창출된 일자리의 수가 2003년 2,000개에서 2008년 228,154개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취약계층, 특히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은 최근에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표 3-1〉 연도별 사회적 일자리 사업 추이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참여부처		노동부	6개	7개	8개	11개	10개
예산 (억원)	전부처	73(추경)	949	1,691	6,782	12,945	15,729
	노동부	73	187	258	517	1,215	1,398
인원 (명)	전부처	2,000	47,491	69,314	111,897	201,059	228,154
	노동부	2,000	3,000	3,910	6,000	12,000	12,445

자료 : 노동부, 「2008 노동백서」, 2008

9)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김혜원 외(2006) 참조.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참여자 현황(2009년 6월말 기준)을 보면, 성별로는 여성 참여자가 12,997명으로 남성(4,776명)에 비해 훨씬 많았으며, 연령대별로는 30~55세의 참여자 수가 10,938명으로 가장 많았고 55세 이상의 경우 3,652명이 참여하였으며 30세 이하의 참여자도 3,183명이나 되었다.

〈표 3-2〉 사회적 일자리 참여자 현황

(단위 : 명)

계	남성				여성			
	소계	30세 이하	30~55세	55세 이상	소계	30세 이하	30~55세	55세 이상
17,773	4,776	1,067	2,282	1,427	12,997	2,116	8,656	2,225

자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의 성인지적 평가」, 2009
 주 : 2009년 6월말 기준

사회적 일자리 사업 참여자 가운데 55.12%에 해당하는 9,796명이 사회 취약계층에 속한다. 이들 가운데 고령자의 비중이 37.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장기실업자(2,466명)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1,228명의 장애인, 245명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그리고 2,246명의 새터민, 노숙자, 여성가장, 신용불량자 등을 포함한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이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직접적이고 1차적인 목표 외에 사회의 통합을 이루고자한다는 보다 거시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일자리 창출이 특정 취약계층에 한정되기보다는 다양한 취약계층을 포함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표 3-3〉 취약계층의 사회적 일자리 참여 현황

(단위 : 명)

계	장기실업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고령자	기타 취약계층 ¹⁾
9,796	2,466	1,228	245	3,652	2,246

자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의 성인지적 평가」, 2009
 주 : 1) 기타 취약계층은 새터민, 노숙자, 여성가장, 신용불량자 등
 2) 2009년 6월말 기준

사업분야별로는 사회복지분야에 전체 참여자의 43.5%인 7,733명이 참여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외에 문화·교육, 환경 등의 순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낸다.

〈표 3-4〉 분야별 사회적 일자리 참여자 현황

(단위 : 명, %)

계	사회·복지	문화·교육	환경	보건	노동	체육	안전	기타
17,773	7,733 (43.5)	4,831 (27.2)	2,462 (13.8)	778 (4.4)	285 (1.6)	33 (0.2)	32 (0.2)	1,619 (9.1)

자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의 성인지적 평가」, 2009

주 : 2009년 6월말 기준

연도별로 보면, 사회복지분야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환경분야가 최근에 크게 증가하였고 문화·관광·교육분야와 보건분야에서의 일자리 사업이 역시 최근에 확대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이 지나치게 돌봄위주의 사회복지와 같은 특정분야에 한정된다는 지적에 의해서, 환경이나 문화와 같이 시장의 기능에 전적으로 의존한 재화 혹은 서비스의 생산에 한계가 있어 공공에 의한 개입이 필요한 분야로 확대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표 3-5〉 연도별·분야별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현황

(단위 : 명)

구분	합계	노동	안전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교육	환경	체육	기타
2003	2,369	355	16	1,300	121	296	236	0	45
2004	3,752	758	29	2,162	62	247	386	0	108
2005	4,971	681	21	2,948	311	350	586	11	63
2006	8,502	701	0	5,651	474	500	782	13	381
2008	19,502	346	0	8,767	1,152	2,218	5,930	21	926

자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의 성인지적 평가」, 2009,

노동부, 「2008 노동백서」, 2009.

2. 고령자

노동부는 고령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과 「전직지원장려금」과 같은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확충차치단체경상보조」와 「아동안전지킴이」 등과 같은 정책들을 시행해 오고 있다.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은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재취업이 곤란한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고령자를 정년 도래 후 계속고용 혹은 재고용한 사업주에게 1인당 월30만원을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이다.¹⁰⁾ 「전직지원장려금」은 고용조정, 정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또는 이직할 예정인) 근로자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 및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상담,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소요비용을 지원한다.

〈표 3-6〉 고령자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분류

유형	정의	일자리 예시	지원내용	수행기관	
사회 공헌형	공익형	지자체 및 공공기관 업무영역에서 창출된 일자리로 지역사회 발전 및 개발에 공헌하는 공익성이 강한 일자리	거리·자연환경지킴이, 교통안전, 방범순찰, 공공시설관리사업, 도서관사서도우미 등	월 20만원, 7개월	지자체 중심
	교육형	특정분야 전문지식·경험 소유자가 복지시설 및 교육기관 등에서 강의하는 일자리로 “자원봉사형” 일자리	숲생태·문화재해설사, 예절·서예·한자강사 등	월 20만원, 7개월	노인복지회관중심
	복지형	사회활동이 어려운 소외계층의 생활안정과 행복추구를 지원하는 일자리	노(老)-노(老)케어, 노인주거개선, 독거노인보호, 보육도우미 등	월 20만원, 7개월	재가노인복지시설 중심
민간 분야	인큐베이터형	사업초기 투자비의 일정 기간 지원이후 사업단 자체수익만으로 사업운영이 가능할 정도로 자립이 예상되는 일자리	노인전용매장(실버카페, 휴게소) 떡 등 식품제조 판매업 등	수익에 따라 배분	시니어클럽 및 대한노인회중심
	인력 파견형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 일정교육수로 후 해당 수요처에 파견되어 일정 임금을 지급받는 일자리	시험감독관, 주유원, 주례사 등 인력풀 운영방식의 사업과 가사도우미, 건물관리, 경비 등 맞춤형 파견사업		

자료 : 보건복지부

주로 보건복지부에 의해 이뤄지는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에게 적절한 일

10) 500인 이하 제조업은 12개월간 지원된다.

자리를 제공하여 이들의 사회적 활동과 소득보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활동성의 증진을 통해 건강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다기능적 프로그램으로, 크게 사회공헌형과 민간분야형으로 구분되며, 2010년도 노인일자리 사업규모는 18만6천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익형 일자리는 환경·행정·복지·교통 등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업 중에서 고령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제공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일자리로 주로 시군구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다. 공익형 일자리는 2004년에 전체 노인일자리 78%를 차지하였으나 기존의 취로 또는 공공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 2005년부터 공익형 일자리 사업의 비율을 낮추기 시작하여 2006년에는 55%까지 축소되었다.

교육형 일자리는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소유자가 교육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서 교육 또는 강의하는 일자리로 숲생태해설사, 문화재해설사, 1·3세대를 연계하는 교육강사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

복지형 일자리는 노-노케어와 같은 생활지원서비스 영역에서 노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2005년에 신설된 유형의 일자리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는 올해 이러한 복지형 일자리 사업의 비율을 20% 이상 추진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민간분야 일자리 사업은 기존 시장에서의 경쟁관계에서 생존가능하도록 하는 일자리나 사업단을 별도로 편성하도록 지원하는 인큐베이터형과 단순히 고령자의 교육과 훈련 등 관리를 통해 시장에 편성되는 일자리에 노인인력을 파견하는 형태의 인력파견형으로 구분된다.

3. 여성

중앙정부는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고용지원센터 설치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운영, 출산여성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의 지급,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지정·운영과 같은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경력단절여성에게 특화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6년 9월부터 주부들이 자주 이용하는 대형 할

인매장에 「주부취업상담실」 2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2007년부터는 경력단절여성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취업지원 서비스 경험이 풍부한 기관을 선정, 「여성고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구직등록, 취업상담 및 일자리 알선, 직업훈련·자격상담 등을 위한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력단절여성 신규채용에 대한 유인책으로 2007년 4월부터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회사를 그만둔 여성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출산여성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엄마채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2008년에 369명의 경력단절여성 신규채용에 182백만원이 지원되었다.

2006년 7월부터 시행된 「임신·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은 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임신기간(16주 이상) 중에 근로계약 및 파견계약기간이 종료된 여성근로자와 계약기간 종료 즉시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후 제도의 개선을 통해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재고용하는 경우 지원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최초 6개월간은 월 60만원, 이후 6개월간은 월 30만원)함으로써 제도의 활성화를 꾀하였으며, 추진실적을 보면 2006년 13백만원이 지원된 것을 시작으로 2007년에 174백만원, 2008년에 383백만원이 지원되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주부 등 여성들을 대상으로 종합취업지원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는 “여성다시일하기센터”의 새로운 명칭으로 2008년 11월에는 노동부와 여성부에 의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계획안”이 마련되었다. 2009년도에 50개소가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2012년까지 100개소로 확대 운영될 계획이다.

여성의 일자리 정책에 관한 장기계획수립의 일환으로 작년 말에 「여성정책조정회의」 심의를 거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2010~2014)」을 확정하였으며, 이 기본계획은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업지원 기능의 전문화·체계화, 돌봄과 고용을 연계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일·생활 조화를 위한 단시간근로 등 유연근무제 확산, 경력단절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4. 장애인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정책은 노동부의 「장애인취업(중증장애인지원고용)」, 「장애인취업(자영업전대지원)」, 「장애인취업(장애인창업용자)」,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행정도우미」, 「장애인복지일자리」 등이 존재한다. 「장애인취업(중증장애인지원고용)」은 상대적으로 취업이 힘든 중증장애인의 고용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지원내용은 직무지도원 30,000원/1일, 훈련대상자 훈련준비금 40,000원/1회, 훈련수당 8,000원, 숙박비 10,000원/1인, 사업주 보조금 17,650원/1일을 포함한다. 「장애인취업(자영업전대지원)」은 창업희망 장애인에게 영업장소를 임대지원(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하고 경영컨설팅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장애인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은 장애인복지일자리와 장애인행정도우미로 구분되어 시행되고 있다. 장애인복지일자리는 7개월간 월 20만원(국비 50%)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임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요 일자리는 학교급식도우미, 관공서 청소도우미 등을 포함한다. 반면, 장애인행정도우미 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은 12개월간 월 85.5만원의 임금을 1개월분의 퇴직금을 지급받으며 주로 주민센터와 같은 관공서나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지역사회재활시설에서 근무하게 된다.

〈표 3-7〉 장애인일자리 창출사업 분류

구분	기간	지원액(월)	부대비용(년)	퇴직금	국고보조율	비고	활동내용
장애인복지일자리	10.3-9 (7개월)	20만원	11만 4천원	-	서울:30% 지방: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리넨실도우미 · 관공서 정원관리도우미 · 학교급식도우미 · 관공서 청소도우미
장애인행정도우미	10.1-12 (12개월)	85만 5천원	-	1개월분 (85만5천원)	서울:30% 지방:50%	4대보험 본인·사업자부담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 주민센터 · 지방자치단체 소속공공기관, 사업소 · 시도 및 시군구 각 실과 · 지방자치 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지역사회재활시설

자료 : 보건복지부

제 2 절 전라북도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

1. 고령자

전라북도는 고령자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올해 국가보조를 포함하여 총 20,991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사업유형별로는 「노인일자리사업」에 18,919백만원(국비 50%, 도비 20%, 시군비 30%)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1만3천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외에도 고령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시장형 초기 투자사업」, 노인회를 통한 「사회적 일자리 사업」, 「전라북도노인일자리추진본부」의 운영지원,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노인공동작업장 운영 등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표 3-8〉 2010년도 전라북도 고령자 일자리 창출사업 현황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사업명	수행 기관수	사업량	사업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노인일자리	106	13,000	18,919	9,460	3,784	5,675
시장형 초기 투자사업	1	10	150	75	23	52
노인회 사회적일자리	15	333	132		132	
노인일자리추진본부 운영	1	상당(1,222), 알선(627), 취업(284), 교육(6,000)	120		120	
노-노케어전문기양성교육	1	700	50		50	
시니어클럽운영	9	290	1,620		243	1,377
노인공동작업장 운영	7	190	-			

자료 : 전라북도 내부자료

전라북도의 고령자 일자리 사업은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인력파견형, 소득창출형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순으로 사업의 규모가 크다. 사업참여자인 고령자가 받게 되는 인건비는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이 월 20만원이며, 소득창출형의 경우 사업단별 자체 규정에 의해 지급되지만 정부보조금은 월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인력파견형의 경우 예산지원이 1인당 연 15만원 이내

서만 가능하다. 참여기간에서는 연중참여를 원칙으로 하는 소득창출형이 가장 길며,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은 7개월 이내, 인력파견형은 수요처에 따라 상이하다.

〈표 3-9〉 2010년도 전라북도 고령자 사회적 일자리 사업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사업유형	일자리수	예산	주요사업	참여기간	근무시간	예산지원기준
공익형	5,930	8,925	환경개선, 학교주변 교통정리, 행정지원, 시설관리지원 사업	7개월 이내	1일 3-4시간 주 3-4일 근무	인건비 20만원/월, 부대경비 11만원/년
교육형	2,372	3,570	학습지도 강사, 여가활용 강사, 전문해설사	7개월 이내	월 20시간 이내	인건비 20만원/월, 부대경비 15만원/년
복지형	3,558	5,355	거동불편자 보호, 시설이용자 돌봄, 소외계층 지원, 주거개선 사업, 아동청소년보호, 문화복지 사업	7개월 이내	1일 3-4시간 주 3-4일 근무	인건비 20만원/월, 부대경비 15만원/년
인력 파견형	360	55	시험감독관, 주례사, 주유원, 경비원, 청소 파견사업 등	수요처 계약기간	수요처 기준	1인당 15만원/년 이내
소득 창출형	780	1,014	제조 및 유통사업, 서비스업, 영농업, 기타 특화사업 등	연중참여 원칙	자체운영규정	참여자 1인당 연간 130만원 범위 내 · 인건비 : 정부보조금은 월 2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사업비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료비, 홍보비, 교육비, 장비비 및 여비 등의 직접 경비로 사용

자료 : 전라북도 내부자료

현재 진행 중인 일자리 사업 프로그램의 수는 324개이며, 이 가운데 시(市)지역에서 238개의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을 포함하는 사회공헌형이 236개 사업을 차지한다. 군지역에서 이뤄지는 사업의 대다수는 사회공헌형에 해당되며, 단지 3개의 군(완주군, 임실군, 무주군)에서만 시장참여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지역에서의 인력파견형을 제외한 시장참여형 사업의 수는 6개에 불과하다. 상대적으로 도시에 비해 농어촌의 비중이 높은 전라북도의 경우 동부권을 중심으로 지역 내 자연자원을 활용한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표 3-10〉 2010년도 전라북도 고령자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지역별 현황

지역별 수행기관(수)	사업 수	유형 (사업수)	세부유형	개수	지역별 수행기관(수)	사업 수	유형 (사업수)	세부유형	개수
전주시 (14)	79	사회공헌형 (48)	공익형	12	진안군 (4)	11	사회공헌형 (11)	공익형	6
			교육형	15				교육형	3
			복지형	21				복지형	2
		시장참여형 (31)	인력파견형	10			시장참여형 (0)	인력파견형	-
			시장형	19				시장형	-
			창업모델형	2				창업모델형	-
군산시 (12)	32	사회공헌형 (23)	공익형	6	무주군 (4)	7	사회공헌형 (5)	공익형	1
			교육형	4				교육형	1
			복지형	13				복지형	3
		시장참여형 (9)	인력파견형	2			시장참여형 (2)	인력파견형	-
			시장형	6				시장형	2
			창업모델형	1				창업모델형	-
익산시 (12)	55	사회공헌형 (42)	공익형	19	장수군 (1)	5	사회공헌형 (5)	공익형	3
			교육형	8				교육형	1
			복지형	15				복지형	1
		시장참여형 (13)	인력파견형	4			시장참여형 (0)	인력파견형	-
			시장형	7				시장형	-
			창업모델형	2				창업모델형	-
정읍시 (8)	24	사회공헌형 (19)	공익형	9	임실군 (10)	18	사회공헌형 (16)	공익형	6
			교육형	2				교육형	1
			복지형	8				복지형	9
		시장참여형 (5)	인력파견형	1			시장참여형 (2)	인력파견형	-
			시장형	4				시장형	2
			창업모델형	-				창업모델형	-
남원시 (8)	24	사회공헌형 (16)	공익형	4	순창군 (2)	8	사회공헌형 (8)	공익형	5
			교육형	4				교육형	-
			복지형	8				복지형	3
		시장참여형 (7)	인력파견형	1			시장참여형 (0)	인력파견형	-
			시장형	7				시장형	-
			창업모델형	-				창업모델형	-
김제시 (9)	24	사회공헌형 (22)	공익형	5	고창군 (4)	14	사회공헌형 (14)	공익형	6
			교육형	5				교육형	3
			복지형	12				복지형	5
		시장참여형 (2)	인력파견형	1			시장참여형 (0)	인력파견형	-
			시장형	1				시장형	-
			창업모델형	-				창업모델형	-
완주군 (10)	15	사회공헌형 (12)	공익형	2	부안군 (5)	8	사회공헌형 (8)	공익형	3
			교육형	1				교육형	1
			복지형	9				복지형	4
		시장참여형 (3)	인력파견형	1			시장참여형 (0)	인력파견형	-
			시장형	1				시장형	-
			창업모델형	1				창업모델형	-

인용 : 최낙관, 고령화시대 노인의 경제활동참여 활성화 방안, 2010.

전라북도노인일자리추진본부는 고령자의 고용을 위한 구인구직 상담과 노인일자리교육센터운영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특히 노-노케어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전라북도 내 9개소의 시니어클럽은 총 1,620백만원의 예산으로 290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로 재활용사업, 반찬사업, 볼펜조립, 농가일손사업, 포장사업, 인력파견, 무공해작물 재배사업 등을 수행한다. 고령자의 공동작업을 위한 노인공동작업장은 도내에 7개소가 있으며, 1,400백만원을 예산을 지원받아 190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여성

전라북도는 올해 여성인력개발 관련사업(9개 사업)을 위해 총 4,342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새일센터운영지원, 새일본부운영지원, 시군취업설계사), 인터넷쇼핑몰 창업스튜디오 지원, 맞춤형 직업훈련(여성친화적 직업훈련 사업, 맞춤형 여성 일자리 창출), 인력개발센터 및 교육문화센터 운영지원, 여성직업훈련 커뮤니티 강화사업 등이 있다.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2,437백만원의 예산으로 익산새일본부와 5개소에 이르는 새일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고 14개 시·군의 취업설계사 배치·운영을 지원한다. 주요 사업내용은 주부인턴제, 일·가정양립 지원, 취업설계사 배치, 직업교육훈련 등을 포함한다.

주부인턴제(또는 새일여성인턴제)는 전업주부 등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여성이 취업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직장적응훈련 프로그램으로 인턴기간은 3개월이며 전일제(주 5일,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¹¹⁾ 인턴을 채용하는 기업은 주부인턴 1인당 월 50만원씩 3개월간 인턴채용장려금을 지원받는다. 올해 본 사업을 위한 예산은 555백만원이며 이를 통해 370명의 주부인턴을 지원할 계획이다.

11) 1일 6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무도 가능하다.

〈표 3-11〉 2010년도 전라북도 여성 일자리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			
			계	국비	도비	시군비
7개 분야, 9개 사업			4,341	1,649	2,236	453
경력 단절 여성	새일센터 운영지원	· 사업량 : 5개소 · 지원방법 : 프로그램별 지원 · 사업내용 : 교육훈련, 주부인턴제, 취업 설계사운영, 일과가정양립복지지원	1,522	1,117	326	78
	새일본부 운영지원	· 선정 : '08. 8월 여성부공모 선정 · 인원 : 12명(본부직원 7, 설계사 5) · 내용 :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등을 지원 · 사업 : 상담, 교육, 취업알선, 사후관리 등 여성취업 종합지원	641	396	91	153
	시·군 취업설계사	· 14시군 취업설계사 19명	273	136	68	68
인터넷쇼핑몰 창업스튜디오 지원		· 대 상 : 6개소(새일센터 5, 새일본부 1) · 지원액 : 센터별 5백만원 · 내 용 : 교육생 작품판매를 통한 인터넷 창업지원	30		30	
맞춤형 직업훈련	여성친화적 직업훈련 사업	· 대 상 : 경력단절여성 210명 · 교육과정 : 5개 과정 210여명 · 교육운영 : 12주정도(주 3일, 1일 4시간) 이론 및 실습 · 추진방법 : 전문기관 위탁	200		200	
	맞춤형 여성일자리 창출	· 대 상 : 고학력 여성대상 120명 · 교육기관 : 전문기관 위탁 · 교육과정 : 5개 직종 120여명 · 추진방법 : 교육과정 및 추진기관 공모통한 위탁교육	100		100	
인력개발센터 (지방이양)		· 인력개발센터 : 2개소 (전주, 군산) · 지원기준 : 1개소 당 260백만원 · 지원내용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등 · 사업내용 : 취업정보, 알선, 직업능력개발훈련, 취미, 교양, 사회교육	520		520	
교육문화센터 운영지원		· 취업정보팀 설치 : '07. 3. 15 · 운영인원 : 3명 · 설치기관 :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 주요역할 : 구인-구직 및 취업정보 구심체 수행, 친여성업체 발굴, 취업정보 DB구축, 취업관련기관 네트워크 구축	835		835	
여성직업훈련 커뮤니티 강화사업		· 사업대상 : 11개 시군 경력단절여성 · 교육기관 : 여성회관 및 사회복지관 등 · 추진방법 : 시군 지역특화 산업 등에 여성인력 수요조사 등 취업처 확보 후 맞춤형 교육 실시 직접취업연계	220		66	154

자료 : 전라북도 내부자료

일·가정양립을 위한 취업지원서비스는 경력단절여성의 가사·육아부담 감소를 통한 취업지원 및 경제활동참여 확대를 위한 것으로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무료 요리교실운영, 새일센터 내 보육시설운영, 돌봄서비스 지원, 여성친화기업협약, 양성평등교육, 기업환경개선(여성전용 휴게실 설치, 여성 탈의실 및 수유실 설치, 여성전용 화장실 설치 등)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을 위

해 올해 335백만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

올해 3월말에 개소된 '전북새일지원본부'는 취업설계사 56명을 도내 14개 시군의 여성회관 등에 파견해 직업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인데, 취업설계사는 구인·구직상담, 취업알선(동행면접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전라북도에서는 새일센터를 통해 462백만원의 예산으로 미취업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교육과정은 OA포토샵마스터, 방과후 연극놀이지도사, 쇼핑몰창업인큐베이팅, 아동학습매니저, CAD설계전문가 등을 포함한다. 이와 더불어, 여성의 취업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구직여성의 직업선호도 검사, 모의면접, 취업계획 수립 등의 직업진로지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표 3-12〉 2010년도 전라북도 여성직업훈련기관 현황

(단위 : 백만원)

기관명	기능	사업비	비고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전주)	· 여성들의 직업훈련 자격취득 및 인적자원개발 교육 운영 취업연계 · 구인·구직 DB구축을 통해 여성취업의 종합정보 제공	835	2005년 전라북도 여성회관을 재단법인으로 설립 민간운영 체제로 전환
여성회관 (10개 시군 -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무주, 순창, 고창, 부안)	· 지역별 사회, 취미, 교양위주 프로그램 운영	220	기초지자체에서 직영으로 운영
여성인력개발센터 (전주, 군산)	·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 취업정보제공 및 취업알선사업, 여성의 고충 상담	520	2005년 여성부 지방이양 사업
새로일하기지원본부 (익산)	· 산업현장의 구직난과 구인난 해소 및 여성친화적 기업환경 조성으로 여성의 경력단절사전 예방	641	2008년 여성부 공모사업 선정
새로일하기센터 전주·군산 여성인력개발센터,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정읍·남원시 여성회관	·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취업지원을 one-stop으로 지원	1,522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2009년 여성부 신규사업

자료 : 전라북도 내부자료

3. 장애인

전라북도의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사업은 크게 공공일자리 사업과 민간일자리 사업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다시 복지일자리와 주민자치센터도우미로 나뉘는데 복

지일자리는 보건소 및 복지관의 물리치료실이나 체력단련실의 건강도우미, 단기보호시설의 케어도우미, 관공서 청소도우미, 보육시설 도우미, 우편물 분류업무, 도서관사서보조 등을 포함하고 주민자치센터도우미는 자치센터의 복지업무를 보조한다. 올해 392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복지일자리 사업을 통해 200명의 장애인이 고용될 계획이며, 2,086백만원이 투입되는 주민자치센터도우미 사업은 150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민간일자리 사업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시범사업추진,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의 연계사업추진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150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시범사업은 2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계획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떡 가공과 기능성 농산물 사업을 포함한다.

〈표 3-13〉 전라북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유형	사업	일자리	예산	주요 사업내용	참여기간	예산지원기준
공공일자리	복지일자리	350	392	건강도우미, 보호시설 케어도우미, 중증장애인 등하교 지도, 관공서 청소, 보육시설 도우미, 우편물 분류, 도서관사서보조, 환경도우미, 주차단속보조 등	7개월 이내	인건비 20만원/월, 부대경비 11.4만원
	주민자치센터도우미	150	2,086	읍면동 장애인 복지업무 보조	12개월 이내	인건비 85.5만원/월, 퇴직적립금 별도
민간일자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50	1,158 (국비 54%)	추진장애인자립작업장의 신축 및 장비보강, 기린작업활동시설(온실) 건립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시범사업	100	2,000 (국비 50%)	떡가공사업, 기능성 농산물 사업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연계 사업	50	-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정산원		

자료 : 전라북도 내부자료

제 3 절 외국의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사업

1. 일본

일본은 1990년대의 경기침체와 제조업 쇠퇴로 인한 실업률 증가와 정부의 부채 증가로 인한 재정지출 감소를 위해 범국가적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였는데 이때 주요 방안으로 제시된 것 중의 하나가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이었다. 인구 노령화에 따른 노인복지서비스 계획안으로서 1989년 「골드플랜」을 발표하여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수요의 증가에 대비하고자 하였으며, 1994년에는 「신 골드플랜」을 통해 보편주의,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지역주의 이념을 기초로 한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노인복지서비스 분야에 대한 고용 증가와 함께 1999년 일본은 「골드플랜 21 계획안」을 발표하여 치매대응형 노인공동생활사업을 추진하였고 2000년의 공적개호(介護)보험¹²⁾ 도입과 함께 특별양호노인홈, 노인보건시설, 노인케어하우스 등의 노인 복지시설 수용인원의 증가와 홈헬퍼 인원 증가 및 주간 보호시설과 단기 보호시설 수용인원 증가 등으로 민영 일자리 부문에 대한 급격한 수요 증가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증가한 일자리들은 대부분 재택 개호서비스와 관련하여 홈헬퍼(방문개호원), 케어매니저, 복지용구대여직, 치매대응형노인공동생활(그룹홈)사업 종사자 등이며, 특히 홈헬퍼(방문개호원)는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수요가 크기 때문에 가장 빠른 증가를 보이는 일자리로서 주로 여성들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홈헬퍼양성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 광역단체(현), 기초자치단체가 각각 1/3씩 부담하며 케어매니저의 경우 사회복지사 혹은 간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로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만 전문성을 인정받으며 급여수준이 높고 정규직의 비율이 높은 일자리이다. 또한 복지용구대여직은 상근직 비

12) 2000년 공적개호보험은 조치제도(기존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서비스를 구입하여 수급자들에게 제공하는 제도)의 폐지와 함께 사회복지사업의 영리기업 진출을 허용한 제도로써 영리기업 진출을 확대시켰고, 이를 통해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증가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율이 재택개호업종들 가운데 가장 높으며, 이밖에 방문간호, 방문목욕 종사자들이 있다. 이러한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는 정부정책에 의한 고용 창출로서 실질적으로는 비정규직과 저임금 노동이 많아 고용의 질적 문제에 있어서 많은 수정이 필요한 단계이다.

또한 일본은 「실버인재센터」를 통해 60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임시적·단기적 취업을 지원하는데, 전국에 걸쳐 1,921개소가 운영되고 회원은 77만명에 이른다. 조직의 운영비와 인건비는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및 인력 지원으로 해결하고 있다. 실버인재센터를 통해 제공되는 일자리는 기능분야, 전문기술분야, 사무분야, 절충/외교분야, 서비스분야, 관리분야, 실외의 경작업 등으로 구분되며 주로 단순노동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표 3-14〉 실버인재센터의 주요 일자리 유형

직종	일거리 예시
기능분야	간단한 목수일, 페인트칠, 정원수손질, 가전제품수리, 칼갈기, 재봉 등
전문기술분야	학습교실강사, 경영상담, 번역/통역, 가정교사, 경리사무, 편집, 영어회화, 보일러 보수관리, 자동차운전, 서예, 컴퓨터 등
사무분야	일반사무, 문서관리, 접수업무, 전표정리, 자료작성, 조사사무, 전화응대, 문서대필 등
절충/외교분야	홍보지배부, 수도/가스검침, 영업, 각종판매, 수금 등
서비스분야	구/시보 배부, 가사원조서비스, 집지키기, 간단한 가정개호, 가정의 보육과 개호, 교통정리, 유적발굴, 관광가이드 등
관리분야	주차장관리, 자전거관리, 마을회관관리, 체육관관리, 학교관리, 공원순회, 빌딩관리 등
실외의 경작업	공원청소, 나무소독, 제초, 풀베기, 상품정리(검품), 포스터붙이기, 빌딩청소, 선전지배포, 포장 등

자료 : 남기철 외(2008), 노인일자리사업 중장기 발전 전략

최근에는 고령자를 활용한 커뮤니티 비즈니스(communitiy business)의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는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에 밀착한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과제해결과 더불어 일자리창출을 꾀하고 있다. 일례로, (주)이로도리는 지역 고령자가 주변 산림에서 채취·가공한 나뭇잎을 납품받아 고급 음식점과 호텔 등에 판매함으로써 고령자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1986년 고령자 4명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194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연간 2억 6천만엔의 매출을 달성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일본의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 정책의 특징

은 전원 참가형 사회구현을 위해 범국가적으로 움직인다는 점이다.

2. 미국

1930년대 이후 등장하기 시작한 미국의 고용관련 정책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역간 분권화 및 대상자에 대한 계층별 상이한 접근이 가장 큰 특징이며, 특히 연방정부는 목표 제시 및 기초법 제정 등을 담당하고, 주정부는 직접적으로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조정하는 역할 등을 수행한다.

공공부문에 의한 직접적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은 연방정부의 법제정으로 인한 제도운영의 틀이 정해지고 지방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면,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프로그램의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주로 지역의 임금보조금지급 프로그램과 창업지원 및 공공부문에 의한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보조금지급 프로그램과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연방정부가 실시하는 프로그램보다 지역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이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전형적인 예는 사업 확장이나 창업 혹은 사업 이전 계획에 대한 위스컨신 지역 공동체 개발 프로그램으로서, 민간투자를 장려하고 고용 기회의 개선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이며, 뉴욕 주의 창업지원 프로그램 역시 뉴욕 소기업 발전센터 등에서 창업을 위한 상담 및 기술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공부문에 의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은 비영리 조직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서 매사추세츠 지역 공동체서비스 프로그램과 위스컨신의 W-2 커뮤니티 서비스 직업전환알선 프로그램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1995년에 시작된 매사추세츠 지역공동체서비스 프로그램은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 비영리 공공기관에서 지역공동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고용관련 기술을 습득하고 최근 근무 경력을 갖게 하여 새롭게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주정부가 실시하는 모든 보조금 제도의 수혜 대상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스컨신의 커뮤니티 서비스 직업전환알선 프로그램의 경우 구직 활동과 고용의 유지를 위해 주정부 등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 및 공원, 위락시설과 종교단체나 병원과 같은 지역 기반 조직과 공공 출연기관의 재생 및 청소, 배송 등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이 고용주가 되어 공원관리, 산림보호, 방범, 교육보고, 도시청소 등의 일자리를 제공하며 직업훈련과 함께 각종 자격증까지 수여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 이러한 공공부문에 의한 일자리 창출방식 이외에도 제 3섹터를 이용하여 정부와 비영리 부문의 협동 과정에 의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역시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정부기관은 자금지원과 방향성을 제공하는 역할과 서비스제공의 재량권을 가진 다른 기관들과의 관계를 면밀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비영리 조직은 국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복지서비스를 전달한다.

실질적으로 비영리 조직의 고용규모는 미국 전체 취업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하며, 의료 종사자와 사회서비스 종사자 역시 각각 35%와 18%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1980년대와 1990년대 연방정부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주정부 재원 사용에 재량권이 늘어나면서 직접적인 현금 수급자를 증가시키는 대신 이 예산을 통한 복지관련 서비스 다양화에 그 목적을 둠에 따라 특정 사회서비스 분야가 확대되었고 이로써 비영리 조직의 역할 역시 동시에 확대되었다.

또한 미국의 고령인구 규모 및 비중의 증가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로 인한 여성 노동력의 공급 증가, 또한 이로 인한 보육서비스지원 수요 증가 및 이혼가정에 대한 지원서비스 증가는 미국의 각종 사회서비스 영역의 확대를 가져왔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대한 수요 역시 급증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취약계층의 일자리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조직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통해 사회 안에서 그들의 역할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비영리 조직들은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위락시설의 설치 및 공원 산책로건설 등의 건설부문, 재활용 작업 및 지역 공원건설, 동물과 식물의 서식지 복원과 관련된 환경부문, 빌딩 측량보조, 역사적 유적이거나 유물 보호관련 업무 등과 관련된 지역서비스, 가족건강 관리 및 면역 조치를 통한 봉사 등의 공중 보건, 방과 후 프로그램 보조, 가정일 보조 등의 교육 및 아동보호 부문 등에서도 일자리를 개발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Pioneer Human Service는 소외 계층을 위해서 고용과 교육 및 사

업 등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비영리 조직 사회적 기업으로서 단순한 취약계층 지원이 아닌 약물 중독이나 실업, 홈리스 상태로부터 벗어나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 기업은 최초로 보잉사와의 협력을 통해 보호 작업장 지원에서부터 보잉사 자사 부품 생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원자재 및 기술 등을 지원하고 구매 계약 체결 등을 주 업무로 하는 Pioneer Industries라는 사회적 기업으로 탄생되었으며 현재에는 Pioneer Human Service 이외에도 집수리, 식품도매상, 카페와 외식사업 서비스 및 포장 사업 등을 통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함으로써 비영리적인 공익성과 기업 이윤 창출이라는 두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하고 있다.

미국은 고령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령자 지역사회서비스 고용 프로그램 (Senior Community Service Employment Program)」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호스피스, 공원관리인, 급식제공원, 말벗도우미, 아동보호원, 주간보호원, 교사보조원, 교통보조원, 법률보조원, 의사사보조원, 행정보조원, 기록원, 문서수발원, 타이피스트, 컴퓨터자료입력원, 경리사원, 경비원 등의 일자리가 제공된다. 미국 사례의 가장 큰 특징은 프로그램이 참여고령자에게 구직을 위한 훈련과정임을 인식시켜 최대한 빨리 보조금이 없는 일반 직장을 얻도록 동기를 유발함으로써 개인별 보조금 지급의 장기화를 예방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고령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다.

3. 영국

영국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완전고용의 달성과 함께 실질적인 복지혜택과 경제 및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노동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고 총수요를 관리해야 한다는 케인지안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1970년대 경제 위기를 통한 높은 실업률과 경기침체는 영국의 재정적자를 지속적으로 심화시켰고 이는 기존의 복지제도 원칙을 잔여주의-즉,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 하고 복지공급 기능을 가족이나 시장에 맡기는 것-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영국 대처 정부의 복지개혁은 금전적인 복지혜택보다는 근로의욕 고취를 그 목적으로 하여 1971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혜택 제도를 세계 최초로 도입하였고, 이

와 함께 가족 소득지원 및 근로가족 세액공제 등을 통해서 제도의 수혜자에게 근로 동기를 제공하였다.

또한 2001년의 블레이어 정부에서도 고용을 유지하고 실업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의 일환으로서 등장한 뉴딜 정책은 '복지로부터 근로'라는 캐치프레이즈 하에 근로연계복지(Workfare)를 강조하여, 청년 계층과 장기 실업자, 구직 중인 편부모와 장애인 취업 등을 장려하고 이들의 고용 유지와 장기적인 노동능력의 향상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았다. 이러한 방식은 복지와 노동정책의 융합된 정책으로서 기존의 복지제도 수급자의 취업에 고용 및 유지 가능성을 좀 더 부가시킨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뉴딜 정책은 여러 집단을 대상으로 제도를 실시하였는데, 우선 청년층을 위한 뉴딜정책은 18-24세 연령의 6개월 이상 구직 수당을 받은 청년을 주 대상으로 하며 구직수당을 2년 이상 받은 25세 성인은 장기 실업 뉴딜 대상으로 분류하여 따로 관리하였다. 준 고령층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뉴딜 정책과 편부모들을 위한 뉴딜 정책 및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려는 장애인 뉴딜 정책으로도 구분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각 개별 상담사들을 통해 근로에 관한 상담과 안내 및 고용 준비를 위한 외부 교육 훈련 과정 등을 제공받으며 이후에 각 대상자들에게 자원봉사 및 환경 감시단과 같은 기관에서의 근로 경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정책은 과거 영국의 노동 시장 정책과는 달리 각각 다른 계층에게 차별화 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실업 급여 신청자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뉴딜 프로그램과 영국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복지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노동시장에 재편입시킴으로써 자립을 유도하고 정부의 복지재정 부담을 줄이는데 그 목적을 둔 제도들로서, 부분적으로는 민간단체에 의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지원함으로써 노동시장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사회 경제를 활성화시켜 빈곤계층의 자활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영국의 고용 창출 지원 프로그램과 달리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경우 1997년 전후로 유럽연합의 유럽사회기금의 프로젝트로 사회서비스 분야 14개, 문화 분야 15개, 환경 분야 14개, 멀티분야 24개로 구성된 시범사업의 정책적 지원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표 3-15〉 영국 사회적 기업의 유형화

형태	정의
노동자 소유기업	노동자들이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존의 기업을 인수하여 공공의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
협동조합	조합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
신용조합	조합원들이 돈을 저축하고 빌리는 것을 돕기 위해 설립된 협동조합
개발신탁	특정 지역이나 공동체의 재개발을 위해 지역공동체, 지방정부, 기업 등의 파트너십에 의해 형성된 조직
지역공동체 기업	지역주민의 자립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지역공동체에 의해 설립된 기업
사회적 회사	장애인 등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을 고용하기 위해 설립된 기업
노동중개시장 프로젝트	장기실업자들을 대상으로 훈련과 구직활동, 유급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자 결성된 조직
자선단체 부설사업체	자선조직의 일부가 기업적인 방법을 도입하여 그들의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형성된 조직

자료 : SEL, 1999(정영순, 2004 재인용).

영국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궁극적인 주체는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빈곤계층의 탈빈곤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¹³⁾ 이를 위해 정부는 1997년 사회적 배제국(Social Exclusion Unit)을 설립하고 영국 전역에 걸쳐 18개의 크로스 커팅(cross-cutting) 정책실행팀(Policy Action Team)들이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이슈들을 다루어 사회적 기업이 번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영국 정부의 무역산업부에(DTI) 사회적 기업국을 설치하여 지방정부의 협력체계하에 사회적 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규제 및 세제, 행정체계 조율, 공공 서비스 중 상당부분이 사회적 기업에 의해 제공되고 지방 정부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영국 정부는 사회적 기업들에게 경영지원 및 훈련,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 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시키고, 사회적 기업의 가치 확립과 문화를

13) 여기에서 사회적 기업이란 보르자가의 정의에 의하면 ‘민간부문의 합법적인 기업형태 및 경영모델과 공공의 재화 및 서비스 제공이라는 목적을 결합시킨 것이지만, 그 위상과 조직형태에 있어서 사회적 목적을 강조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영국 노동당 정부의 사회적 기업 정책은 기본적으로 사회 불평등과 소외 문제 등을 해결하며 보다 나은 사회 건설을 위한 것으로 2006년도 영국 정부에서 제시한 사회적 기업 조건에 충족되는 사회적 기업은 55,000개 이상의 수를 기록한다. 참고로, 영국의 사회적 기업은 제 3세계 이민자, 장애인, 저학력 청년, 장기 실업자 등의 사회적으로 배제된 계층의 노동 통합 목적이 매우 강하며, 유럽 대륙의 사회적 기업과는 달리 사회적 경제 조직과 공동 작업장, 협동조합, 노동자 소유기업 등 유형 역시 다양하다.

배양하여 기업의 경영자문 및 정보 접근성 확충, 재정 접근성 확충, 정부부처와 협력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사회적 기업 개발을 위해서 ICOM, ICOF, CDA과 같은 민간 부문의 지원 조직 역시 구성이 되었는데, (i) ICOM(Industrial Common Ownership Movement)은 모든 종류의 사회적 기업 개발과 관련된 활동을 지원하는 영국 노동자 생산협동조합 전국 연맹체로 법률상담, 기술훈련, 회계 등의 서비스 제공과 정책개발과 중앙 및 지방정부에 대한 로비활동을 담당하였고, (ii) ICOF(Industrial Common Ownership Finance)는 노동자 생산협동조합에 투자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전국적인 대부 사업을 통해 자금 규모를 넓히고, 1987년에 공공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여 노동자 생산협동조합에 대한 대부사업 지속을 위해 기금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iii) 마지막으로 CDA(Co-operative Development Agencies)는 25년 이상 노동자 생산협동조합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모든 유형의 사회적 기업 개발로 현재 영역을 확장시켰으며, 신규 설립 사회적 기업에 대한 조사 연구 및 사업 아이디어 개발을 위한 형성지원금, 기술훈련 지원금, 전문 경영자 고용을 위한 운영지원금, 개별 노동자에 대한 고용지원금, 자본지원금, 회계상담 원조지원금, 기업대부기금 등의 다양한 재정적 지원을 실시하였다.

〈표 3-16〉 영국의 파트너십 사업

사업명	후원(자금)	사업 내용
London Credit Union Programme	환경·교통·지역개발국 / London Development Agency - SRB 5	전국적 조직인 ABCUL과 공동으로 런던에 신규 신용조합들을 설립하는 것.
Management Resources	환경·교통·지역개발국 특별 보조 프로그램	사업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적 기업의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운영에 필요한 자원을 창출.
Beeline Project	전국복권자선위원회 (National Lottery Charities Board)	인터넷 자료, 주요 통계 데이터 등 사회적 기업에 관한 전문화된 정보 제공 및 전파.
Enterprise for Communities	DETR/LDA - SRB6	보육 및 의료/사회적 케어 부문의 사회적 기업의 재원마련, 훈련 및 경영 지원을 위해 전략적이고 조정된 접근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
Training for Advisors	ESF - SRB6	사회적 기업 전문가들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 마련.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기초적 교육에서부터 대학원까지의 교육과정 마련.
Health Impact Assessment	보건국	Tower Hamlets(새로운 모델의 신용 협동조합)를 사례로 사회적 기업이 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으로써 보건의료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과 결합된 새로운 메커니즘 모색.
Social Enterprise Business Clusters	LDA/DTI Innovative Clusters Fund	온라인 소프트웨어 제품을 비롯해 제반 ICT도구들을 개발함으로써 핵심 성장부문의 사회적 기업 설립 및 발전 지원.

자료 : SEL(1999).

4. 시사점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추세를 경험한 일본의 경우 고령자의 개호를 위한 일자리 특히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이들 고령자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정 계층만을 위한 일자리 사업이 아닌 지역공동체 전체를 위한 지역단위의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이뤄짐을 볼 수 있으며, 전라북도 동부권의 경우 이러한 일본의 지역공동체 단위의 일자리 창출사업-이를테면, 이로도리-을 벤치마킹하여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농촌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장참여형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근래 미국의 저소득계층을 위한 정책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수급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수급조건을 강화하고 근로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있으며, 주로 지방정부와 민간단체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추진되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경우도 참여자들이 지원받는 일자리에서 지원이 없는 민간 일자리로 조속히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더불어,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연방정부, 주정부, 카운티, 지역에이전시(사례관리사 및 직업훈련기관), 사업참여자, 참여대상자로 연결되는 각기 명확한 역할이 분담되어 있는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다(홍미희 외, 2009).

영국은 뉴딜 프로그램을 통해 연령대별로 대상을 구분한 후, 각 대상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일자리 창출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복지수혜자 가운데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자립을 유도함으로써 정부의 복지재정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 더불어 부분적으로나마 민간단체에 의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다.



제 4 장

전라북도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발전방향

제 1 절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성공요인

제 2 절 전라북도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방향

제 4 장 전라북도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발전방향

제 1 절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성공요인

1. 기존 사업의 문제점

1) 사회적 일자리 사업 전반

(1) 목표의 불명확성

사회적 일자리는 고실업 사회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기제로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일자리 사업 대부분이 국가의 지원에만 의존하여 본연의 좋은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일자리 정책이 표방하는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의 공급이라는 두 가지 목표가 어느 하나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는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¹⁴⁾ 즉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보다는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 부조라는 성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회서비스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정부가 당연하게 책임지고 공급해야 할 사회서비스를 민간자원을 동원하여 낮은 임금에 낮은 품질의 서비스를 싼 값에 공급하는 것으로 양질의 사회서비스 공급에도 실패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는 것이다.¹⁵⁾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시장형)은 사업자체의 수익성에 제약이 따를 뿐만 아니라 마케팅, 전략기획, 홍보 등 경영상의 전문지식이나 노하우가 부족하여 성장력이 열악하다. 이로 인해, 사업의 지속성이 결여되고 예산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는 문제를 지닌다.

사회적 일자리가 임시직 혹은 일용직 일자리를 양산하고 저임금의 악순환을

14) 2003년 기준 OECD국가의 평균적인 사회서비스부문 고용비중은 21.7%인 반면, 우리나라는 12.7%로 터키의 12.6%와 함께 가장 낮음(김혜원, 2006).

15) 보다 자세한 논의는 김영철·이민환(2007) 참조.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을 양산하고 있다. 단기간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목표의식으로 인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이 저임금, 미숙련, 비정규직 일자리의 양산으로 제한된다.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취업취약계층과 근로빈곤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에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보다는 빈곤의 일상화를 가져옴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경기의 침체에 따른 취약계층의 한시적 일자리 창출이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목표가 될 수도 있지만, 경기침체의 장기화는 정부의 예산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켜 종국적으로는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2) 기존 시장과의 충돌

사업의 내용적 측면에서는 전체 일자리의 상당부분이 돌봄서비스와 같은 사회복지 위주에 편중되는 반면, 문화·예술분야 등의 일자리 창출이 아직까지도 미흡한 것으로 지적된다. 이와 더불어, 민간분야와 시장충돌의 발생으로 기존의 사적 일자리를 사회적 일자리가 구축(crowd-out)한다는 측면에서의 일부 사회의 부정적 시각과 사회통합의 한계를 표출하고 있다.

노동부는 2006년까지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중앙정부 부처별로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개념이 혼란하여, 사회적 일자리사업의 목적이 일자리 창출인지, 사회서비스 제공 확대인지가 불분명하다. 둘째,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의 역량이 부족하다. 셋째, 사회적일자리사업단에 인건비 지원만 하고, 실제 운영과 관련한 직업훈련, 경영지원, 성과관리 등의 제도적 지원이 미흡하여 사업성과에 한계를 지닌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성에 한계를 지녀 지역사회 자원활용과 지원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어려워진다.¹⁶⁾

16) 노동부, 2007년 사회적일자리 사업설명회 자료 참조.

2) 전라북도 사회적 일자리 사업

전라북도의 고령자를 위한 사회적 일자리 사업 역시 여러 측면에서 부족함을 나타내고 있다. 사회공헌형(비생계형) 일자리 사업의 경우 취로사업이나 공공근로 수준의 사업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어 내용적으로 취약하다. 일자리 사업내용의 사회적 혹은 경제적 가치고양이 필요하다. 희망근로사업과 노인 일자리 사업은 내용이나 일자리의 수준이 비슷한 반면, 임금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더불어 고령자가 사회적 일자리 사업참여를 통해 받는 임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¹⁷⁾ 현재 진행 중인 노인 일자리 사업은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지역별 편중이 심한 상태이다. 고령자 인구비율이 높은 농산어촌 지역에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비도시 고령자들의 사업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사업의 유형별로는 사회공헌형에 비해 시장참여형의 비중이 너무 낮으며, 향후 고령자의 노동시장 편입을 위해서는 시장참여형 노인 일자리 사업의 발굴과 육성이 필요하다.

2009년 6월 기준 전라북도에 38천명 이상의 중증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전라북도 전체 장애인 가운데 29% 이상을 차지한다. 작년 12월에서 올해 2월 사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고용포털에 등록된 전북거주 552명의 장애인 구직자 가운데 19.2%가 장애등급 1급 혹은 2급의 중증장애인이었을 정도로 취업에 대한 의지나 욕구 또한 강함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중증장애인 가운데 44.3%가 전혀 일을 해본 경험이 없음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통해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중앙정부는 사업체들의 장애인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 관리비용’, ‘시설자금융자’, ‘무상지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연계고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자회사형 표준사업장’과 같은 다양한 지원제도들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업체의 인지가 부족한 상황이다(장영석 외, 2009). 전체 사업체 가운데 5.7%만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며, 고용의무 사업체 가운데에는 15.0%, 그리고 300인 이상의 사업체 중에서는 36.0%만이 인지

17) 희망근로의 경우 월 80만원을 받는 반면, 노인 일자리 사업은 월 20만원에 불과하다.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함께,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중증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해 기업체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제도는 고용장려금 지급금액의 인상과 세금감면인 것으로 조사된다.¹⁸⁾

2. 성공사례

1) 국내

(1) 신천 에스파스

프랑스의 'Espaces' 사업을 도심하천인 대구 신천에 도입하여 생태복원과 복지증진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신천일대의 식생자원과 동식물상자원의 분포현황 파악, 생태공간 디자인 및 조성, 생태환경 감시활동을 포함한다. 대구시, 도시개발공사, 대구YMCA가 운영협의회를 구성하며, 생태환경의 기술적 자문을 담당하는 자문위원회와 사업단, 그리고 후원회를 통해 사업을 운영한다. 후원회는 카페와 블로그 운영, 소식 전달, 후원 회원 모집, 모금활동을 담당한다. 본 사업의 특징은 사업의 전 과정에 걸쳐 시민의 참여가 활성화 되어 있다는 점과 생태공간 조성과정에서 중장비와 같은 기계에 의한 작업들을 최소화하고 인력 지향적인 작업과정을 통해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2) 신나는 문화학교

신나는 문화학교는 문화예술의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가정, 노인, 이주 노동자, 장애아동 등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문화공간, 문화콘텐츠 서비스 제공 등 공공영역이나 기업들이 수행하기 어려운 제3섹터의 문화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문화예술계의 여성, 청년층, 지역문화 운동가 등의 문화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문화예술

18)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장영석 외(2009)를 참조.

분야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취약계층에 해당하여 사회적 일자리로서의 취지에 부합한다. 본 사업은 사회서비스의 공동개발, 문화예술에 있어서의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제공, 문화예술의 활성화라는 사회적 목적이 명확하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3) 전통문화사랑모임

전통문화체험교실, 외국인전통문화체험교실, 지역문화 강좌, 전통문화연찬 및 전통소재 상품개발, 전통주 보급 등의 프로그램 운영과 전주한옥생활체험관 중심의 숙박 및 전통문화체험 등의 다양한 유무료 서비스 제공 등을 포함한다. 본 사업은 지역의 독창적인 문화유산과 지역 내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관광문화사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경제와 문화를 재생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4) 여성 희망일터 찾아주기 사업

충청북도에서 수행된 여성 희망일터 찾아주기 사업은 사업의 기획과 추진과정 등에 민간단체와 관이 함께 참여하였으며, 지역의 복지수요를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하여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여성의 일자리를 발굴한다. 기존의 여성 일자리 창출 사업은 관의 주도로 사업비를 분배하는 방식이 주를 이룬데 반해, 이 사업의 경우 민관이 사업의 기획과 추진과정에 함께 참여하여 단순한 취업교육이 아닌 사회 재진입 훈련을 통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경력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여성을 위한 기존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들과 차별화된다.

2) 국외

(1) Pioneer Human Services

1963년 교정시설 수용경력의 약물중독자, 전과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지원, 직업훈련, 상담, 치료, 주거복지 제공을 위하여 설립된 사회적기업으로, 보잉사의 지원과 장기 하청계약이 이루어지는 파이어니어 인더스트리(Pioneer Industries), 스

타벅스가 지원하는 파이어니어 푸드서비스(Pioneer food Service) 레스토랑 등 12개에 달하는 사회적기업체를 운영하여 연간 1,000여명을 고용하고 있다. 범죄 및 약물중독으로 인한 교정시설 퇴소자를 주 고용 대상으로 하며, 취약계층(청소년, 노숙자, 이민자, 여성 등) 고용을 통한 자립기회 제공과 적응, 일상생활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적 상담과 지원을 실시한다. 참여자의 지속고용, 공동창업적 성격보다는 일반 노동시장 취업을 위한 경과적 일자리, 직업훈련, 취업 경력 기회 제공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2) Le Club des Petits dejeuner du Quebec

미래 성장동력인 아이들에게 영양학적으로 평등한 기회를 열어주는 것을 미션으로 아동의 급식 및 영양결핍 문제를 해소하고자 예산지원을 받아 1994년 퀘벡지역에서 설립된 클럽으로 현재 캐나다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3) Green Works

Green Works는 대기업, 정부부처의 잉여 또는 불필요한 사무용 가구를 처리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학교, 자선단체, 지역사회, 신생기업에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중고 사무가구 기증기업에게는 저렴하고도 공익적인 방식으로 중고가구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돕고, 사회적으로는 자원 재생과 재활용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저렴하게 가구를 공급하고 있다.

(4) Goodwill

20세기 초 미국 메사추세츠주 보스턴시에서 실업자, 노숙인, 장애인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시작되었으며, 재활용매장의 운영을 통해 교육,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및 임시고용, 지속고용 등 4가지 영역을 통해 수익창출과 고용을 지원하고 있다.

3) 시사점

다른 나라의 경우, 경제적 빈곤뿐만 아니라 인종문제와 같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인해 사회가 계층화되어 있으며, 사회적 일자리 혹은 사회적 기업을 통해 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한다. 이를 통한 사업들은 지역의 특성을 잘 활용하고 지역사회 여러 계층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에 기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성공사례로 간주된다.

국내 사례의 경우, 특히 인천 에스파스와 신나는 문화학교는 기존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영역을 확대했다는 공통점을 갖지만, 전자는 공공재인 하천의 생태복원이라는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공공의 개입이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반면 후자는 창출된 서비스가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못한 계층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복지측면에서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전통문화사랑모임은 우리 전통문화의 대내외 전파라는 부수적인, 그러나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그 자체보다도 의미가 큰, 효과를 지닌다. 여성 희망일터 찾아주기 사업은 사업의 초기단계인 기획에서부터 민간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행정이나 사업수행전담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기존 대다수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들과 차별화된다.

제 2 절 전라북도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방향

1. 기본 방향

1) 고용창출 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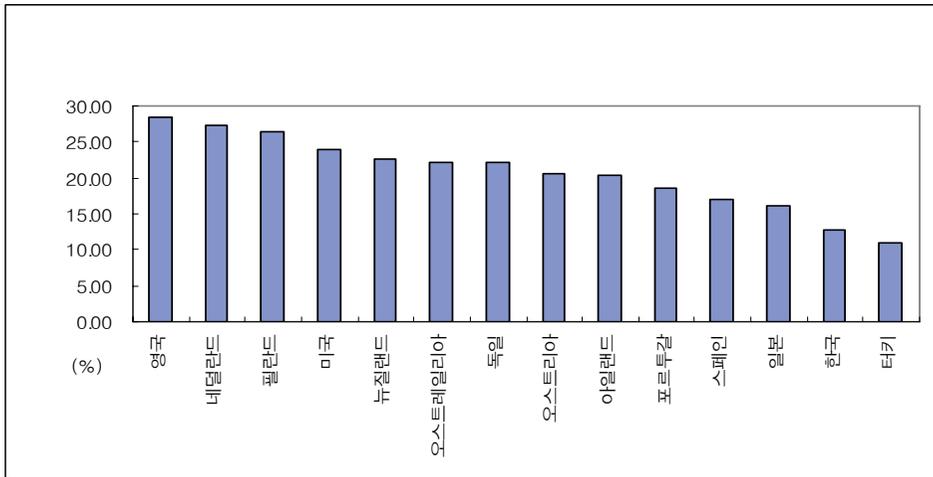
국가 전체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현안인 현 시점에서 지자체차원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노력이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욱이, 최근 실업증가의 구조적인 문제는 제조업의 고용창출력 저하에 일부 기인함을 감안할 때, 기업의 유치에 의한 지역 내 일자리 창출도 용이하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부품 및 소재의 높은 해외의존도로 인해 수출의 취업 유발효과가 하락하는데, 수출의 취업 유발계수(명/10억원)는 2000년 15.3에서 2007년 9.4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보건복지나 사업서비스의 경우 고용창출효과가 크나 진입 및 투자규제 등으로 인해 시장형성이 미흡하여 고용창출에 기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¹⁹⁾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중앙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지자체 정책의 마련이 필요한데, 중앙정부는 재정일자리사업 효율화,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제고 및 구조개선, 서비스산업 선진화, 투자활성화, 교육 제도개선, 인력양성 등을 통해 고용의 확대를 꾀하고 있다. 60세 이상의 고령자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 고령자 종합인재은행 확충 등을 마련할 계획이며, 여성을 위해서는 단시간 근로, 재택근무 활성화, 보육서비스 확충 등을 통해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은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및 유효 고령 근로 인구의 증가와 함께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로 인한 경제활동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면서도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있어서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분야의 고용비중은 매우 낮은 편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선진국과의 사회서비

19) 또한 우리나라는 서비스업 가운데 고용유발효과가 크지 않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종 위주로 성장한다는 점에서 서비스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에 한계를 지닌다.

스 분야 고용비중을 비교하면, 영국이 전체 산업 대비 사회서비스업 종사자가 약 28.3%로서 가장 높고, 미국과 일본이 각각 23.9%와 16.0%이며, 우리나라는 12.6% 수준으로서 터키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향후 이 분야에서의 고용창출 가능성이 높음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림 4-1〉 OECD주요국 사회서비스 고용비중 현황

자료 : <http://www.ilo.org>.
 주 : 비교연도는 2005년.

저출산·고령화의 가속화로 인해 사회적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여성이 돌봄서비스 공급자로서의 비교우위를 지니기 때문에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촉진시키고 노인·아동·장애인 가족원의 돌봄에 대한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공공에 의한 돌봄서비스 공급의 확대가 필요하다.

돌봄서비스와 같이 높은 고용창출 잠재력을 지닌 사회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분야의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과 요구되는 제도의 마련이 전제된다. 수준 높은 양질의 돌봄서비스가 사회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필요한 지식과 기술, 자격기준 등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가사와 근로의 병행이 가능케 하는 단시간 근로 및 재택근무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보육서비스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미국

AT&T사는 연방정부 차원의 맑은 공기 만들기 법(Clean Air Act)의 일환으로 재택근무제를 도입하였으며, 1980년대의 시험기간을 거쳐 약 200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참여 근로자 가운데 83%가 일과 가정생활에 조화를 이룰 수 있었고 75%가 생산성이 향상되었다고 답하고 있다.²⁰⁾

2008년에 미국의 경우 공공부문에서 1.8백만명이 원격근무의 방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 출퇴근 자유시간제, 토요일격주 근무제, 재택근무제와 같은 변형근로제를 도입하였으나, 이는 외국의 경우와 같이 기존 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도라기보다는 고용형태의 변형을 통한 인건비 절감 등에 목적을 두고 있었다. 2005년 기준 전체 사업체 가운데 단지 1%미만의 업체에서만 원격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

더불어, 원격근무(telework)의 활성화를 통한 중증장애인 고용창출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통신 기반시설이 이미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원격근무의 시행에 있어 기술적 장점을 지니고 있다. 도심에서의 교통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중증장애인을 위한 원격근무 시행의 필요성이 강조된다.²¹⁾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원격근무의 시행은 장애인의 통근의 불편함을 감소시킴으로써 장애인 노동자에게 이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부담이 경감하는 고용업체에게도 혜택이 발생할 것이다.

실제로 한국통신은 1997년에 35명을 대상으로 서울 지역에 한하여 야간시간대의 114안내 업무를 원격근무로 전환하여 실시하였고, KOIS로 분사된 이후 2007년 기준 원격근무자의 수는 239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이 가운데 약 30%인 70명이 장애인 근로자이었을 정도로 장애인의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 민간부문에서는 대한항공이 항공권 예약 원격근무직에 여성장애인 30명을 고용하고 있다. 2005년 장애인근로자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근로자 가운데 단지 0.6%만이 재택고용되어

20) 하지만, 이러한 장점과 더불어 동료들과의 의사소통 및 팀워크 형성 등에 한계를 드러낸다.

21) 특히 일본의 경우 도심지 상업지역의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한 기업의 경직성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도심 외곽 지역의 사무실을 원격근무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이 활성화 되었고, 독일의 경우 2002년에 원격근무 근로자의 수가 6백만에 이르렀으며 이는 독일 전체 취업인구의 약 16.6%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된다(오길승 외, 2008).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의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²²⁾

2) 사회적 일자리 사업

(1) 지역자원의 연계 강화

〈표 4-1〉 지역자원연계 사업 사례

기관명	연계형태	연계내용
사람과 환경	업무 위탁 정보 및 기술 지원	전주시로부터 폐기물 재활용 관련업무 위탁 전주시 자원순환포럼을 통해 재활용 기술전수 및 전문정보 제공
전통문화사랑모임	업무 위탁	전주시로부터 전통주 박물관 및 한옥체험관 운영권 수탁
울산동구지역자활센터	업무 위탁	울산동구에서 공중화장실, 18개 학교화장실관리사업, 바닥광택입주청소 등 위탁
안산생활	현금 지원 기술 지원	부산시로부터 차량유지비 등 매년 1억원 수수 부산대 간호학과와 연계한 실비 직업교육 지역 출판사를 통한 홍보물 발간 지원
푸른환경코리아	현금 지원 판로 지원	함께일하는 재단을 통한 자본 대부 성공회대학에서 빈곤철거민 고용기업으로 인식, 수의 계약
맛을 만드는 사람들	현물 지원 판로 지원 전문성 지원	마포구청 유희시설 활용한 작업장 무상임대 마포구청 행사시 출장뷔페 이용 이화여대 내 생협매장 납품시 가점부여 지역 내 비영리기관 행사 도시락 구매 회계법인을 통한 무료회계교육 신라호텔 한식팀 무료조리교육
우리가 만드는 일과 미래	전문성 지원 판로 지원	역사체험 여행업체를 통한 기술지도 및 직업훈련 제공 교직원연합회 등을 통한 수학여행 서비스 위탁
햇살나눔	현금 지원 현물 지원 기술 지원	지역 내 신탁을 통한 저리 대부 및 자본출자 유기농 생산자 조합과 원주 한살림 등을 통한 원자재의 자가 조달 함께일하는 재단의 해외 기술연수 지원

자료 : 황정란,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사례소개, 2008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개념이 생소한 사업 초기에는 중앙정부에서 제시한 일자리의 예시 위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일자리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여 사회적 일자리로서의 충분한 실효성을 달성하는데 한계를 드러냈다. 전통문

22)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재택근무지원제도」를 통해 중증장애인을 재택근무의 형태로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원격근무자 고용에 따른 작업장비의 구입, 설치, 수리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으나 여전히 이의 확대 시행으로 인한 원격근무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화사랑모임의 경우 사업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지역 고유의 전통과 문화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운영의 측면에서 전주시로부터 전통주 박물관 및 한옥체험관 운영권을 수탁받음으로써 지역자원을 잘 활용하고 있는 사례에 해당한다.

전북의 경우 동부권의 환경자원을 활용한 일자리-특히, 노인을 위한 일자리-의 창출 노력이 필요하고, 장애인의 경우에도 기존의 공간이나 시설-이를 테면, 도내 70개소에 이르는 지역재활시설, 28개소에 달하는 생활시설-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지역의 특성(전통문화, 전통음식)을 보다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산림·지역개발·문화·환경 분야 등에서의 일자리 창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2) 사업의 이원화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이의 정의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공공성과 자립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자립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이윤의 창출이 가능해야 할 것이나 이 경우 굳이 공공이 관여를 하지 않아도 민간에 의해 시장이 형성될 것이므로 공공 개입의 논리가 타당하지 못하다. 따라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을 공공을 위한 것과 자립을 위한 것으로 이원화하여, 전자는 사회복지의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후자는 사업의 예산자립 확보를 통한 일자리의 지속성 증가를 목표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이 공공성보다는 자립성에 중점을 두는 경우 최종 목표인 지속성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사회적 일자리가 민간 일자리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단계별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공공의 예산에 대한 의존성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향후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시장형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초기 기획단계에서부터 민간의 참여를 통해 사업의 수익성을 개선시켜 예산에 있어서의 자립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통해 창출된 시장이 민간에 의한 기존의 시장과 충돌하여 민간의 정상적인 일자리를 시장에서 구축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²³⁾

(3) 참여대상별 사업 목표의 차별화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참여대상-이를 테면, 노인, 여성, 장애인-에 따른 사업의 구분은 사업의 내용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 특정 참여대상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단순히 참여자의 업무능력이나 특성만을 고려하여 정해지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참여자 유형별로 사업의 목표가 차별화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의 경우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개발이 일자리 사업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하며,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일자리 사업의 경우 이들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일에 대한 경험을 쌓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하고 노인의 일자리는 이들의 소득을 보전하여 생계비에 보탬이 되는 보조적인 수단이나 일을 하는 것 자체로부터의 만족감을 얻도록 하는 일종의 방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사항은 사업의 예산에 대한 의존성의 심화로 일자리의 지속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사회적 일자리는 경과성 일자리로서 참여대상의 유형에 알맞은 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신체장애자들이 일하는 영국의 국영 제조회사인 램플로이(Remploy)나 장애인에게 직업을 알선해 주는 기관인 스웨덴의 삼할(Samhall)과 같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는 이들이 일반적으로 전직(transition)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의 초기에서부터 기업과 연계하여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를 익혀,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종료 후에도 민간 업체에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앙정부차원에서 운영하는 장애유형별 특화훈련센터는 장애유형별로 적합한 일 혹은 직무를 개발한다는 점에서 좋은 예에 해당한다.

23)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이뤄지는 학교청소는 기존 청소용역업체와의 경쟁을 초래하여 이 업체에 고용된 사람들이 공공에 의해 일자리를 잃게 되는 모순을 초래한다.

〈표 4-2〉 장애유형별 특화훈련센터 운영 현황

구분	특화유형	주요 훈련직종
일산센터	시각장애 청각장애	시각 : 컴퓨터속기, 정보관리 청각 : 전산응용기계가공(CAM)
부산센터	정신장애 뇌병변장애	정신 : 바리스타, 선박전기제어, 전자출판 뇌병변 : 디지털비주얼디자인, 정보경영
대전센터	청각장애 정신장애	청각 : 제과제빵, 반도체패키징, 전자기기 정신 : 화과자제조
전남센터	뇌병변장애 지체(절단)장애	뇌병변 : 임베디드시스템, 공무원사관 지체(절단) : 디지털미디어, 애니메이션
대구센터	시각장애 지체(척수)장애	시각 : 프랜차이즈 안마창업, 일반창업 지체(척수) : 게임마스터, 방송자막속기

자료 : 노동부, 노동백서, 2009

(4) 기업연계 활성화를 통한 지자체 예산부담 경감

공익형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나 사회적 기업의 지자체 예산에 대한 의존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향토기업을 연계한 사회적 원조 확보(대신에 참여기업에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제공) 혹은 사회연대금고를 통한 기금조성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연대금고는 그 추진주체, 사업분야, 사업목적에 따라 상이한 형태를 지니는데, 유럽의 경우 지역화폐(Local Exchange Trading System), 투자자 클럽(Investor Club), 사회·윤리·환경 은행(Merkur, GLS, Gemeinschaftsbank, EkoBanken, Triodos Bank, la NEF), 공공창업지원기금, 윤리은행(Banca Etica), 생산자협동조합 금융지원 네트워크(Worker's Cooperative), 공동체은행(Community Bank), 고령자지원 프로그램(Senior Citizens Assistance), 여성사회연대금고 등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기업을 연계한 사회적 일자리 혹은 사회적 기업은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에 있으나, 일부 연계사업의 민간기업들은 단순한 운영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경영자문, 직원의 자원봉사, 마케팅 지원, 판로 지원, 공간 제공 등의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포스코의 자회사인 포스위드는 국내 제1호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되어 포스코 및 관계사 현장직원의 근무복 세탁이나 사무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총인원의 48%인 122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다. 이 경우 자회사에 고용된 장애인은 모회사의 종사자로 간주되어 모기업의 장애인의무고용조건 충족의 방편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에도 이점이 존재한다.

전라북도의 300인 이상 사업체 수는 66개이고, 이 가운데 20개의 업체가 제조업에 속하며, '2008년 사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지원제도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사업체들 가운데 82.7%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의 장애인 고용 확대에 대한 효과를 확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4-3〉 기업연계형 사회적 일자리(기업) 사업 사례

기관명	연계단체명	연계내용
교보다솜이	교보생명	연간 17억원 운영비 지원 경영자문, 추가적 수익모델개발 지원 등
숲생태지도자협회	교보생명	연간 2억5천만원 지원
행복도시락	SK	3년간 100억원 시설운영비 지원 사회적기업 설립 및 수익개발비 30억원 별도지원 경영컨설팅, 직원자원봉사 연계
안심생활	현대자동차	연간 5억원 지원
한국YMCA 전국연맹	SK에너지	연간 12억원 운영비 지원 경영, 마케팅 지원 (연 1회 정도)
벤엘의 집	LH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주식회사 창조	연간 2천4백만원 지원 숫부작 제작, 원료배학기술 지원 시장, 판로 제공
청람사회복지회	의료법인 호연재단 한수원 원자력본부 농협중앙회 영광군지부	시설, 공간 제공, 이동차량 지원 운영비, 경영기술 지원 수혜자 발굴
충북시민문화센터	하이닉스 엘리에드(광고업체) 지역신문사 등	연간 총 1억원 지원 홍보동영상 제작, 일상적 홍보지원 서비스 이용자 발굴 및 지원
실업극복국민운동 인천본부	대덕건설 신성평생교육원	연간 1천2백만원 지원 교육공간 지원
마리교육협동조합	강화도 환경농업영농조합	학교 등 급식공동사업 추진 시장판로 개척 및 수입처 개발
성미가엘	구청, 주민자치센터	아동공부방 공간 지원

자료 : 황정란,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사례 소개, 2008

2. 제안 사업

1) 고령자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분야별로 구분할 때, 가장 취약한 분야 가운데 하나는 문화·예술분야이며 전주의 지역적 특성 혹은 지역적 자원인 전주 한옥마을을 활용하는 전통혼례 및 민속놀이의 재현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를 제안한다. 전주 한옥마을이나 경기전에서 전통혼례나 민속놀이를 재현함으로써 이곳을 방문하는 외국인이나 초·중등 학생들에게 볼거리와 우리의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전통혼례나 민속놀이의 재현과 이에 대한 해설사의 배치를 통해 고령자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최소한 수익의 창출이나 인건비 보전을 위한 방안으로 입장수요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기전 입장의 유료화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²⁴⁾

도심의 초·중등 학생들의 경우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다. 이를 위한 대안학습의 일환으로 학교의 옥상이나 교내 부지의 일부를 활용한 채소의 재배나 가축의 사육을 통해 학생들의 자연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자연체험학습장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이를 고령자의 사회적 일자리와 연계할 수 있을 것이다. 자연체험학습장의 운영비와 인건비의 일부는 사용자 비용부담의 원칙에 따라 학교나 학부모의 부담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²⁵⁾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고령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자전거를 이용한 재래시장 택배사업을 고려해 볼만 할 것이다. 전주시 보조사업으로 전주시 내 일부 재래시장에서 이미 실행되고 있으나, 이를 도내 다른 재래시장에서도 확대시행함으로써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고령자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목표의 달성

24) 전주시 문화관광과의 통계에 의하면, 경기전의 연간 방문객은 37만여명으로 하루 평균 1천명 수준임을 고려할 때, 입장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입장료 징수로 인건비의 상당 부분이 충당될 것으로 기대되며 문화재 해설사의 경우 항시 배치되는 것이 적절하나 전통혼례·민속놀이의 재현은 주말이나 공휴일, 평일의 경우 단체 관광객의 사전 예약을 통해 비정기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25) 전북 도내 6개 시에 281개의 초등학교가 존재한다.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사업의 주요 비용은 사업에 참여하는 고령자의 인건비이며, 이는 택배를 이용하는 재래시장 상인의 수익자부담에 의해 일부가 충당되어 예산에 대한 의존이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²⁶⁾

일정규모(연면적 5천 평방미터) 이상의 건물은 시민을 위한 공개공지를 내어 놓게 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건물주는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얻는다. 하지만 공개공지가 불법적으로 주차장이나 물건을 두는 장소로 악용되어 시민들의 휴식처로 활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공무원을 대신하여 공개공지를 관리할 인력의 채용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고령자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2) 경력단절여성

도내에는 약 16개의 야학이 존재하는데 일반적으로 주 5일 수업에 한글반, 중등반, 고등반, 기타반으로 구분되어 운용되고 있으며 학생수는 30-80명에 이른다. 교사는 일반 직장인이나 방학기간 중 대학생들의 자원봉사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교사의 공급이 부족한 상태이며 안정적이지 못한 형편이다.²⁷⁾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으로서 도내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을 야학의 선생님이로 파견하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장애인

기업체들의 장애인 의무고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기업체의 장애인-특히 중증장애인에 대한 자발적 고용을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노동부의 조사에 의하면, 기업체가 장애인의 고용을 꺼리는 주된 이유

26) 도내에 73개소의 재래시장이 존재한다.

27) 실제로 익산시 소재 한 야학의 경우 최근에 교사가 없어 폐교할 처지에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야학들 가운데 대부분의 학교가 선생님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일부 야학의 경우 다수의 선생님을 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는 장애인에게 적합한 업무 부족(39.6%), 작업 중 안전의 우려(23.3%), 장애인에 적합한 시설이나 장비 부족(14.1%) 등이며, 이를 고려할 때 기업체에 대한 중증장애인 고용의 강요는 오히려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그 일자리를 감소시킬 위험이 있다.

이러한 장애인 고용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중증장애인 고용확대는 원격근무(혹은 재택근무)의 형태가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의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민원처리체계의 도입을 고려해 볼만 할 것이다.²⁸⁾ 미국의 원격근무 연구소(National Telecommuting Institute, NTI)와 같은 장애인을 위한 원격훈련 및 직업매칭을 위한 비영리 조직을 설립·운영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장애인 원격근무 사례로는 정보전문가(information specialist), 치료사(therapist) 등이 존재하는데, 전자의 경우 원격근무 장애인은 본인의 가정에서 오후 4시 50분부터 새벽 1시까지 외부에서 오는 전화를 받아 민원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DIAS(Daten, Informationssysteme und Analysen im Sozialen)의 연구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컴퓨터 등 IT기술을 활용한 업무와 대민 접촉이 빈번하지 않은 업무가 장애인이 접근하기에 적합한 직종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일례로 웹관리자, 전산분야, 통계, 정책분석 및 기획, 세무 및 회계분야, 인사 및 법률상담, 전화안내, 번역, 기사편집, 정보매니지먼트, 서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일본의 Challenge 고용(장애인의 주 업무는 우편분류 및 복사용지 보충, 문서 폐기업무, 컴퓨터 자료 입력, 자료 정리 등 주로 사무보조로 근무)은 일반기업으로의 전직에 필요한 업무경험 축적 혹은 적응성 향상을 위해 장애인을 공공기관에서 1-3년간 비상근직원으로 고용하는 것으로 이와 유사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28) 도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관계자에 의하면, 중증장애인의 경우 출퇴근 자체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 있음을 지적한다.



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제 2 절 정책적 함의

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전라북도 취업취약계층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도내 고령자·여성(특히, 경력단절여성)·장애인의 현황과 이들의 경제활동 현황 등을 분석하고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 및 해외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대한 사례를 검토하여,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그리고 이를 반영한 구체적인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제안한다.

전라북도의 경우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1년의 10.67%에서 2008년 14.69%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의 사회적 일자리 혹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에 의한 고용을 제외한 순수 고용률은 크게 나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령자에 대한 취업기회의 확대가 없이, 지금과 같은 고령화가 지속될 경우 이들을 부양해야 하는 사회전체의 부담-이를 테면, 연금 재정의 악화-는 가중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여성은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의 단절을 경험하고 이로 인해 노동시장 재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취업기회의 확대를 위한 노력의 부재는 우리나라 저출산현상을 지속시킬 것이며, 이들의 학력수준이 남성의 그것과 동등한 수준으로 높아졌음을 감안할 때 이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사회적 비용의 발생을 의미하기 때문에 공공에 의한 이들의 취업기회 제공이 정당성을 얻게 된다.

고령자와 마찬가지로 전라북도 장애인의 인구비율 또한 2002년의 3.93%에서 2008년의 6.5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의 고용은 크게 증가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도내 장애인의 구직정보를 분석한 결과,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상당수가 중증장애인이었으며 취업에 대한 경험이 없는 경우도 다수이며 민간 기업에서의 이들에 대한 고용을 꺼리는 주된 이유가 장애인에게 적합한 업무

의 부족임을 감안할 때 이들의 고용촉진을 위한 공공의 개입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시행 초기에는 사회적 일자리가 정부의 재정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저임금의 공공근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로 인해 정부는 2005년부터 사업유형을 '공익형'과 '수익형'으로 구분하고 공익형 사업은 원칙적으로 1년 지원에 한정하는 반면 수익형 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간 지원받도록 함으로써 수익형 사업의 비중을 높이려고 노력하였다. 나아가, 2006년에는 기업과 NGO 혹은 여기에 지자체가 포함된 협력체를 구성하여 대규모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중장기적으로 자립을 지향하는 기업연계형 프로젝트 사업과 광역형 사업모델의 발굴과 확산에 중점을 두었다.

2009년 6월말 기준으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노동부를 포함하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참여자의 수가 12,997명에 이른다. 전라북도의 경우 올해 18,919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노인을 위한 1만3천개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2,437백만원의 예산으로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지원하며, 2,478백만원의 예산으로 350개의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일본은 고령자의 개호(介護)를 위한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이들 고령자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지역공동체 전체를 위한 지역단위의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이뤄짐을 볼 수 있다. 근래 미국의 저소득계층을 위한 정책은 수급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수급조건을 강화하고 근로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있으며, 주로 지방정부와 민간단체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추진되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경우도 참여자들이 지원받는 일자리에서 지원이 없는 민간 일자리로 조속히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추진주체(연방정부, 주정부, 카운티, 지역에이전시, 사업참여자)간 각기 명확한 역할이 분담되어 추진상의 효율성이 높다. 영국은 뉴딜 프로그램을 통해 연령대별로 대상을 구분한 후, 각 대상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일자리 창출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복지수혜자 가운데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자립을 유도함으로써 정부의 복지재정

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부분적으로는 민간단체에 의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다.

기존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일자리의 지속성이나 괜찮은 일자리의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점 이외에 일반적으로 목표가 명확하지 않고 일부 사회적 일자리는 민간에 의한 정상적인 일자리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내용적 측면에서의 개선이 요구된다. 전라북도의 경우 시장참여형 사업의 낮은 비중과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업의 부재와 같은 추가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국내외 성공 사례를 보면,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특정 계층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 여러 계층을 사업에 참여시킴으로써 사회통합을 달성하고 환경, 문화, 예술, 전통 등 사업을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한다. 또한 지역자원을 잘 활용하고 사업의 초기단계인 기획에서 추진과정까지 민간을 참여시킴으로써 사업의 실효성을 높인다.

전라북도의 사회적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자원의 연계 강화, 사업의 이원화, 참여대상별 사업 목표의 차별화, 기업연계 활성화를 통한 지자체 예산부담 경감 등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취약계층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제안하면, 노인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로 문화유적지에서의 전통혼례 혹은 민속놀이의 재현, 도심 학생들의 대안교육을 위한 자연체험학습장의 운영,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를 이용한 택배사업, 구도심 재생을 위한 공개공지의 관리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의 경우 도내 상당수의 야학에서 교사를 구하고 있지 못한 실정을 고려해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을 야학교사로 파견하는 사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의 경우 기업을 연계한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추진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 2 절 정책적 함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은 취약계층에 취업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사회통합에 기여한다는 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사업에 대한 평가는 관점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며, 특히 사업의 지속성이나 참여자의 만족도를 비롯하여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수년에 걸쳐 거대한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평가, 특히 투입예산대비 질(quality)이 반영된 창출된 일자리의 수와 같은 예산에 대한 효율성의 분석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업일지라도 이에 대한 정당성이 사회복지의 개념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전체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후생경제학적 관점도 상당부분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기존 사업들에 대한 적합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의 기준은 민간에 의한 기존 일자리가 사회적 일자리에 의해 구축되는 부정적 측면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전라북도의 사회적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자원의 연계 강화를 통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사업의 이원화를 통해 사업의 목표를 명확히 하며, 참여대상별 사업 목표의 차별화로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 곽태열(2007), 선진국의 장애인 고용정책과 시사점(장애인 중심기업을 중심으로),
경남발전연구원
- 기획재정부(2010), 최근 고용동향 및 정책방향
- 김영철·이민환(2007), “양극화와 사회적 일자리 사업: 사회적 경제의 관점에서”,
지역사회연구
- 김혜원 외(2006),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
원
- 남기철 외(2008), 노인일자리사업 중장기 발전 전략
- 노대명(2001), “서구 사회적 일자리 창출정책의 검토와 전망”, 보건사회연구 21(1),
pp. 3-66
- 노동부(2009), 2008 노동백서
- 보건복지부(2007),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 보건복지부(2007), 보건복지통계연보
- 심진예·이효성(2009), 장애인고용저조기업의 고용촉진방안, 한국장애인고용촉진
공단 고용개발원
- 오길승 외(2008), 원격근무 활성화를 통한 중증장애인 고용창출 및 확대를 위한
기초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 이달엽 외(2009),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실태 분석 및 효율성 제고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 이순희·박석용(2009), “중증장애인의 근로육구 및 실태조사를 통한 고용확대방
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9(9), pp. 304-312
- 장영석 외(2009), 2008년 사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 전병유 외(2003), 사회적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조경옥 · 이지연(2009), 전북 미취업 기혼여성 직업교육실태분석 및 취업연계 방안, 전북발전연구원
- 지은구(2009), “노인 일자리사업 정착을 위한 사회적 기업 활성화방안”, 사회과학논총 28(1), pp. 357-410
- 최낙관(2010), “고령화시대 노인의 경제활동참여 활성화방안”, 전라북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 통계청(2010),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 통계청(각 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보고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9),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의 성인지적 평가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2009), 2008년 사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
- 홍미희 · 최수영 · 윤연숙(2009), 인천여성 사회적 일자리 사업 발전방향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 홍자영(2009), 일본의 경제위기 상황 속에 장애인 고용대책,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目 次

부 록

부록 <표-1> 인구성장률, 인구구조, 부양비, 노령화지수

구분	2038	2039	2040	2041	2042	2043	2044	2045	2046	2047	2048	2049	2050
총인구(천명)	46,954	46,657	46,343	46,011	45,663	45,297	44,917	44,521	44,111	43,688	43,251	42,803	42,343
0-14세	4,982	4,883	4,777	4,667	4,554	4,441	4,329	4,220	4,116	4,017	3,926	3,841	3,763
15-64세	27,422	26,954	26,525	26,129	25,749	25,362	24,949	24,503	24,039	23,583	23,159	22,775	22,424
65세 이상	14,551	14,820	15,041	15,215	15,359	15,494	15,638	15,798	15,956	16,088	16,167	16,186	16,156
인구성장률(%) ¹⁾	-0.59	-0.63	-0.67	-0.72	-0.76	-0.8	-0.84	-0.88	-0.92	-0.96	-1.00	-1.04	-1.07
인구구성비(%)													
0-14세	10.6	10.5	10.3	10.1	10.0	9.8	9.6	9.5	9.3	9.2	9.1	9.0	8.9
15-64세	58.4	57.8	57.2	56.8	56.4	56.0	55.5	55.0	54.5	54.0	53.5	53.2	53.0
65세 이상	31.0	31.8	32.5	33.1	33.6	34.2	34.8	35.5	36.2	36.8	37.4	37.8	38.2
총부양비 ²⁾	71.2	73.1	74.7	76.1	77.3	78.6	80	81.7	83.5	85.3	86.8	87.9	88.8
유소년부양비 ³⁾	18.2	18.1	18.0	17.9	17.7	17.5	17.4	17.2	17.1	17.0	17.0	16.9	16.8
노년부양비 ⁴⁾	53.1	55.0	56.7	58.2	59.6	61.1	62.7	64.5	66.4	68.2	69.8	71.1	72.0
노령화지수 ⁵⁾	292.1	303.5	314.8	326	337.2	348.9	361.2	374.3	387.7	400.4	411.8	421.4	429.3

자료 :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2010

주 : 1) 인구성장률은 전년도 대비 인구증가율

2) 총부양비 = 유소년부양비 + 노년부양비

3) 유소년부양비 = (0~14세 인구 / 15~64세 인구) × 100

4) 노년부양비 = (65세 이상 인구 / 15~64세 인구) × 100

5) 노령화지수 = (65세 이상 인구 / 0~14세 인구) × 100

부록 <표-2> 연도별 민간부문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단위 : 개소, 명, %

구분	대상 사업체수	상시 근로자수	적용대상 근로자수	고용 의무인원	장애인 근로자	고용률	
1990년	2,017	2,448,361	-	21,000	7,758	-	
1991년	2,178	2,808,557	2,170,898	21,692	8,764	0.40	
1992년	2,242	2,885,010	2,152,751	33,411	8,748	0.41	
1993년	2,158	2,640,209	2,013,363	39,059	8,843	0.44	
1994년	2,141	2,719,944	2,092,005	40,585	9,097	0.43	
1995년	2,229	2,922,444	2,238,490	43,505	9,582	0.43	
1996년	2,227	2,917,096	2,255,180	44,294	9,816	0.44	
1997년	2,184	2,907,897	2,240,868	43,411	10,331	0.46	
1998년	1,919	2,537,312	1,952,499	38,145	10,625	0.54	
1999년	1,925	2,526,972	1,960,002	38,903	13,997	0.71	
2000년	1,891	2,592,819	1,976,996	39,523	14,434	0.73	
2001년	2,090	2,589,763	2,017,926	39,314	17,640	0.87	
2002년	2,159	2,673,494	2,097,031	40,859	20,709	0.99	
2003년	2,141	2,683,546	2,101,610	40,971	22,718	1.08	
2004년	50-299인	14,588	1,617,746	1,309,380	19,469	18,514	1.41
	300인 이상	2,362	2,862,550	2,240,990	43,643	28,160	1.26
	소계	16,950	4,480,296	3,550,370	63,112	46,674	1.31
2005년	50-299인	15,012	1,666,823	1,357,036	20,118	22,581	1.66
	300인 이상	2,402	2,975,801	2,338,559	45,610	32,428	1.39
	소계	17,414	4,642,624	3,695,595	65,728	55,009	1.49
2006년	50-299인	16,504	1,831,831	1,544,921	29,157	28,120	1.54
	300인 이상	2,564	3,157,301	2,495,988	61,920	39,141	1.24
	소계	19,068	4,989,132	4,040,909	91,077	67,261	1.35
2007년	50-299인	17,705	1,951,533	1,677,653	31,124	32,988	1.69
	300인 이상	2,670	3,033,542	2,490,188	59,391	43,416	1.43
	소계	20,375	4,985,075	4,167,841	90,515	76,404	1.53
2008년	50-299인	19,287	2,102,222	1,831,827	33,641	40,513	1.93
	300인 이상	2,740	3,109,564	2,584,034	60,876	49,151	1.58
	소계	22,027	5,211,786	4,415,861	94,517	89,664	1.72

자료 : 노동부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8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2009

- 주 : 1) 2003년까지는 월평균 상시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2004년부터는 50인 이상으로 확대
 2) 2006년도부터 업종별 제외율 폐지 적용
 3) 2008년 12월 말 기준

부록 <표-3> 2003년 사회적일자리 창출 시범사업 유형

사업명	단체	주요내용	참여자유형	참여인원
외국인근로자 적응지원	남양주 이주노동자여성 센터 등	언어문제, 사회적 편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의 국내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한글교육, 고용허가제, 노동상담 등 실시	고학력 청년층	196
산재근로자 간병 및 재활 지원	노동건강연대 등	산재환자의 상담 및 법률구조를 통해 적절한산재보상을 받도록 지원하고, 심리 상담, 교육훈련을 통한 재활지원	장애인, 장기실직자	19
교통안전 교육지원	참여자치군산 시민연대 등	어린이들과 교사,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실을 운영하는 등 교통안전을 지원	여성, 장애인 장기실업자	18
방과후 교실운영 지원	한국여성노동자 회협의회 등	저소득 가정, 맞벌이 부부, 실업자 가정 등의 자녀들에게 학습 지도 및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	고학력, 여성 중·장년층	332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	성남YWCA 등	청소년에게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제공,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자원봉사활동 지도 등 아동·청소년들을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 지원	청년층 중·장년층 여성	243
노인 관련 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	박애재가 노인복지원 등	신체 허약 노인 및 치매노인들을 돌보고 각종 편의, 의료, 상담 지원 및 일자리 제공 등 노인들의 심신기능 향상과 자아성취를 지원	중·장년층 여성 고령자	224
장애인 상담 및 복지	성남실업대책 위원회 등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들에게 이동서비스를 제공, 장애인을 위한 각종 봉사활동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청년층	248
푸드뱅크 등 재활용 사업	부산실업극복 지원센터 등	잉여음식을 수거, 폐컴퓨터를 수리, 저소득층에 무상기증, 자원재활용센터인 녹색가게를 운영하는 등 자원 재활용으로 환경보호에 기여	청년층	116
간병 등 의료서비스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등	환자 등에게 가정도우미를 파견하여 의료서비스 등 각종 편의 제공, 방문간호 및 보건복지 상담 지원, 방역 등 전염병 예방 및 교육 등	중·장년층 여성	558
문화재 관리·문화교육	(사)청소년참사량 운동본부 등	문화재를 관리, 해설, 홍보하거나, 문화체험 및 교육을 실시하거나, 문화공연, 사료조사 작업 등	중고령자 장기실업자	107
환경보호 및 감시활동	한국일용근로자 복지협회 등	환경보호·감시, 환경교육 및 체험이나 관광지관리 등의 활동으로 쾌적한 환경 유지	저소득 취약계층	155

자료 : 노동부 보도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의 성인지적 평가(2009)에서 재인용

부록 <표-4> 2004년 사회적일자리 창출 사업례

분야	사업내용	단체	지역
노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노동자 한글교육 및 노동상담 • 일하는 청년들을 위한 노동상담 • 산재근로자 간병사업 등 • 저소득근로자 및 맞벌이 부부 자녀 방과후 교실 	푸른시민연대 부산청년문화센터 거제YMCA (사)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부산동래여성인력센터	서울북부 부산청 통영 부산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놀이시설위생관리사업 •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자 육성 및 교육장 운영 	수원희망자활후견기관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	수원 군산
사회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거노인 및 노인가정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 거동불편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 가정을 위한 무료 뽕래방사업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 피학대 아동보호 그룹홈 아동보육사업 • 독거노인에 대한 사랑의 도시락 배달 •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 장애인을 위한 보호 및 직업재활 • 실버 익스프레스 • 중풍, 치매 어르신 간병사업 • 가정의료, 가정호스피스 활동 	강남시니어클럽 강동종합사회복지관 부산성폭력상담소 어린이보호재단인천지부 지역복지센터나눔과함께 실업극복시민연대 세종장애아동후원회 강남시니어클럽 박애제가 노인복지원 천주교 유지재단	서울강남 서울동부 부산동래 경인청 인천북부 대전 안양 서울 서울
보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랑인 간병인 사업 • 어린이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장난감병원 사업 	마리아수녀회은평의마을 희망본부	서울서부 전주
문화 관광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문화기행 지도 • 이동 청소년 수련광장 • 청소년 건전경제생활 교육 및 캠페인 • 청소년 5일 금연학교 운영 • 저소득층 아동 도서관 운영 • 올바른 성문화 정착을 위한 인형극 • 가출청소년을 위한 문화교육 	서울동부여성발전센터 청소년참사랑운동본부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우리누리청소년회 광명YMCA 익산여성의전화 안양청소년쉼터FOR YOU	서울동부 서울남부 부산청 수원 안양 익산 안양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교를 개보수하여 물 체험학교 설치운영 • 연안 환경 모니터링 및 자료 구축 • 펌컴퓨터 수거 및 무상기증 사업 • 공중화장실 청소 등 • 유기농산물 재배 어린이집 등에 무료제공 	무지개세상 부산녹색연합 부산실업극복지원센터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부스리기사랑나눔회	서울동부 부산청 부산청 경인청 인천북부

자료 : 노동부 보도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의 성인직적 평가(2009)에서 재인용

부록 <표-5> 2005년 사회적일자리 창출 사업례

분야	사업내용	단체 및 지역
노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노동자 상담 및 지원 · 봉제여성노동자들의 자녀를 위한 교육 · 취약계층 일일취업상담 및 알선 · 실버지하철택배사업 · 방과후 아동지도교실 	<p>천주교노동사목위원회 (사)참여성노동복지터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위례시민연대 영월군사회복지협의회</p>
사회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가 및 의료복지를 통한 지역사회보호 · 거리노숙인 지원사업단 · 서울광역푸드뱅크 및 푸드마켓운영 · 독거노인, 장애인을 위한 간병인파견 · 시각장애인 이동지원 · 노인 Care 복지사업 · 중증장애인 전환교육 및 취업전훈련 · 상쾌,통쾌 건강안마실 운영 · 저소득 중증장애여성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활동보조 파견서비스 · 희망나눔푸드뱅크 사업단 · 정신지체재활사업 	<p>신당종합사회복지관 대한성공회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장위종합사회복지관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 충현복지관 하상장애인복지관 장애여성공감 녹변종합사회복지관 교남소망의집</p>
보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자부랑인환자 간병 · 양환자의 간병 및 가사도우미사업 · 장단기 요양센터운영 · 만성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생활지도사업 ·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작은기업 	<p>서울시립은평의 마을 우리호스피스선교회 대한호스피스선교회 수원시정신보건센터 의료생활협동조합연대</p>
문화 · 관광 ·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숲생태지도자사업 · 문화유산해설사 양성교육 및 파견 ·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센터 운영 · 학교도서관 전문인력(사서)지원양성사업 · 전통지역문화체험프로그램사업 · 주5일 수업제에 따른 교육지원 사업 	<p>서울중로노인지원인력지원기관 (사)한국지역사회시니어클럽협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사)경남정보사회연구소 (사)전통문화사랑모임 야산 YWCA</p>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눔과 순환의 재활용사업 · 환경교육영상물 프로그램 제작과 환경교육사업 · 사람사랑 물비누사업 · 환경오염 감시활동 및 주부생태지도자양성을 통한 청소년 환경교육 · 재활용 및 유리병 수거,분리 · 새마을 사랑의 나눔터 · 저소득노인자립을 위한 재활용품수집 판매사업 	<p>아름다운가게 무지개세상 신월종합사회복지관 환경을사랑하는중랑천사람들 춘천자활후견기관 새마을운동 태백시지회 문경모전사회복지관</p>

자료 : 노동부 보도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의 성인지적 평가(2009)에서 재인용

부록 <표-6> 2006년 기업연계형 사업 선정례

단체명	참여기업	사업명	참가자수	사업규모 및 주체별 부담
실업극복 국민재단	SK텔레콤	결식이웃지원 도시락 급식센터	173명	○ 사업규모: 93억원 - 기업: 48억원 - 정부: 13억원 - 수탁: 31억원 - 이월금: 1억원
한국 YMCA 전국연맹	SK(주)	시간제보육지원을위한 보육지원센터	160명	○ 사업규모: 33.6억원 - 기업: 19억원 - 정부: 14.6억원
실업극복 국민재단	교보생명	교보다솜이 간병봉사단	102명	○ 사업규모: 24.9억원 - 기업: 12.8억원 - 정부: 8.4억원 - 수탁: 3.7억원
노인과 복지	현대자동차	저소득 거동불편자안심생활 지원 사업단	70명	○ 사업규모: 14.2억원 - 기업: 5억 - 정부: 6.4억 - 부산시: 1억 - 수탁: 1.8억
부스러기 사랑나눔회	SK(주)	빈곤 결식아동 문화·학습 지원체계구축	95명	○ 사업규모: 20.3억원 - 기업: 15억원 - 정부: 5.3억원
실업극복 수원센터	돈화상사	폐자원 재활용사업	53명	○ 사업규모: 7.6억원 - 기업: 1.3억원 - 정부: 4.8억원 - 수탁: 1.5억원
청람사회 복지회	농협중앙회 영광지부외	농촌형 종합 생활지원	52명	○ 사업규모: 11.2억원 - 기업: 6.7억원 - 정부: 4.5억원

Jthink 2010-PR-03

전라북도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구

발행인 | 원도연

발행일 | 2010년 12월 31일

발행처 | 전북발전연구원

560-014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57(중양동 4가 1)

전화:(063)280-7100 팩스:(063)286-9206

ISBN 978-89-92471-94-7 9333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발전연구원에 속합니다.

